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國內學術會議 發表論文集

1994. 1. 25.

民族統一研究院

序 文

北韓의 「核武器擴散禁止條約」(NPT) 탈퇴선언(1993. 3. 12)을 계기로 지난 한해동안 北韓 核問題는 國內外的으로 심각한 懸案으로 대두되었다. 북한의 핵무기개발 가능성과 NPT 탈퇴선언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되어 이를 저지하기 위한 關係國들의 노력은 韓半島 周邊情勢를 긴장시켜왔을 뿐 아니라 南北韓 關係改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원칙을 준수하고 國際條約上的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核疑惑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올해들어 북한 핵문제는 梗塞局面에 머물면서 핵문제 해결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유보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이러한 상황하에 本 研究院에서는 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政策代案 개발에 기여하고자 1994년 1월 25일 「北韓-核問題와 南北韓 關係展望」이라는 주제로 第10回 國內學術會議를 개최하였다.

이 보고서는 금번 國內學術會議에서 발표된 論文과 討論內容을 수록한 것으로, 토론내용은 발간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재편집하였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北韓 核問題와 남북한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균형된 인식을 제고하고, 남북 화해·협력관계 정착을 위한 政策代案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4. 2.

民族統一研究院

政 策 研 究 室

目 次

序 文

開 會 辭	李秉龍	1
I. 會 議		3
1. 北韓 核斗 對北政策	梁性喆	5
2. 北韓 核問題 解決을 위한 戰略的 選擇과 協商對策	全星勳	34
3.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柳錫烈	54
II. 綜合討論：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73
附錄：會議日程		92

開 會 辭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展望」이라는 주제로 第 10 回 國內學術會議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발표자·사회자·토론자로 참석하여 주신 학자·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公私多忙하신 중에도 이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來賓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歡迎하며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北韓 核問題가 금명간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南北關係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 보다는 美·日과의 關係改善에만 집착하고 있는 北韓의 태도로 보아 올해도 南北關係가 우리의 기대수준 만큼 개선되리라고 낙관하기는 무척 힘든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한해동안 우리 정부는 남북한 화해·협력 분위기를 고양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대북협상 자세를 표방해 왔습니다. 그러나 北韓은 NPT 탈퇴선언을 계기로 긴장상태를 고조시키는 한편, 核問題를 협상카드화하여 對美접근에 總力을 다해 왔다고 보겠습니다. 「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발표하여 대남선전공세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이 이미 합의한 남북고위급회담을 무시하고 특사교환이라는 새로운 회담형식을 제의하는 등 일련의 남북대화를 중단시키고 오직 핵문제를 계기로 對美 直接協商에만 주력한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정부는 美國을 비롯한 關係國들과 긴밀한 國際共助體制를 유지하면서 北韓 核問題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만, 우리의 바램과는 달리 남북한 관계의 실질적 진전은 또다시 올해의 과제로 넘어오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研究院은 北韓 核問題가 남북한 관계개선 및 한반도 평화통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하에, 북한 핵문제 및 남북한 관계전망에 대한 학계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남북한 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政策樹立에 기여하고자 이번 學術會議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유익하고 알찬 학술토론의 場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各界의 전문가 여러분께서 진지한 의견을 교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開會의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

1994. 1. 25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李秉龍

I. 會 議

빈 면

北韓 核과 對北政策

梁 性 喆

慶熙大 平和福祉大學院 教授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북한핵과 관련 국가의 입장 |
| II. 북한핵을 둘러싼 3가지 神話 | IV. 요약 및 몇 가지 제언 |

I. 머리말

북한 핵문제는 그 자체도 심각하고 중차대하지만 이를 통해, 특히 지난 4년간¹⁾ 비단 우리나라 국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북한의 眞面目(문자 그대로 氷山의 一角이겠지만)… 그 실상, 체제 모순과 한계(경직성), 정책의 무모성과 과격성, 전략의 모험주의와 극단주의 등을 약간이나마 터득할 수 있는 좋은 교육(교훈)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1)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가 1989년 2월에 북한이 1985년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뒤 18개월만에 서명하기로 되어있는 핵안전협정을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1994년 2월이면 4년이 되는 셈이다.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에 관한 최근 분석으로는 Jin-Hyun Paik, "Nuclear Conundrum: Analysis and Assessment of Two Korea's Policy regarding the Nuclear ISSUE," *IFANS Review*, vol. 1, no. 3 (December 1993) 참조.

蛇足이지만 여기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외국 언론·방송매체들이 북한 핵문제를 거의 매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이러한 현상을 미제국주의자들이 꾸며낸 “핵소동”이라고 비아냥대지만, 직접 피해당사국이 될 수 있는 우리들보다 오히려 외국언론·방송매체가 더 설치하는 것도 부인하기 힘들다.²⁾ 김일성도 1994년 신년사에서 “미국과 그 추종자들이 떠드는 우리의 핵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미국이 집요하게 추구하는 반사회주의, 반공화국 책동의 산물입니다. 있지도 않은 북의 핵무기를 끌어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도 미국입니다. 그러므로 조선반도에서의 핵문제는 어디까지나 조·미회담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합니다.” 라고 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한국도 핵문제에서 배제하는 책략을 던지시 내보이고 있다.

아무튼 마치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뒤로 해서 한국대학생들의 반정부시위와 경찰의 최류탄 맞대결의 장면이 단골메뉴가 되어 외국의 단순독자 단순시청자들에게는 한국은 마치 “데모의 천국”, “데모의 아수라장” 같은 일방적인 착각과 편견을 갖게 한 것을 상기시킨다.

이제는 또 한반도에서 금방 “핵”이 폭발할 것 같은 위험수위의 논조들도 있다. 물론 언론·방송매체는 어떻게 보면 정부나 관계기

2) 지난 12월 말 Seoul Forum 초청으로 온 미 뉴욕타임즈 외교정책 칼럼리스트인 Flora Lewis를 만난 자리에서 사적으로 필자가 이 문제를 물어보았다. 도대체 “왜 미국신문들은 NYT를 포함해서 거의 똑같은 얘기인데 북한 핵관계 기사를 매일이다 싶이 재탕·삼탕 싣고 있는가? 좀 북한문제를 아는 사람에겐 신물이 날 정도다 라고.” 그녀의 답변은 물론 북한 핵문제 자체도 대단히 심각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미국군사비 증감과도 연관하다고 귀뜸을 했다.

관의 공식입장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다.

4가지 보기만을 들어 보면, 부시 前미대통령 당시 합참의장 파워(Colin Powell)대장이 미하원 외교분과위 증언(1992년 3월 4일)에서, “우리(미국)의 계획속에는 단순히 억지(detering)하거나 방어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 필요하다면 억지와 방어후에 북한을 제거(ejecting)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힐 수는 없으나, 다시는 똑같은 일(북한의 침략행위)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히 하겠다³⁾고 경고한 바 있다.

1993년 7월 클린턴 미대통령이 한국방문길에 東京에서의 NBC와의 인터뷰에서도 “만약 그들(북한)이 핵무기를 개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우리는 엄청난(overwhelmingly) 보복을 가할 것이다… 또 그것은(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사용)은 그 나라(북한)의 끝장을 뜻한다”(“it would mean the end of their country”)라는 최강도의 경고를 서슴치 않았다. 또 그는 유럽·동구·러시아 방문 중(94년 1월 16일)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만약 북한, 이라크, 리비아 등의 나라에 의해 위협을 받을 때는 미국은 미사일을 초비상 경계태세로 재배치할 것이며, 미사일을 다시 북한이나 다른 곳으로 그 공격목표를 정할 때는 우리는 신속히 할 수 있다”(“The United States could put its missiles back on hair-trigger alert if threatened by a country such as North Korea, Iraq or Libya… If we had to target a missile, God forbid, at

3) *The Korea Times*, March 7, 1992; 필자의 질문, “북한주체 외교의 한계와 방향,” 「사상」(서울: 사회과학원, 1992년 여름호), pp. 264~285 참조.

North Korea or any place else, we could do it very quickly”⁴⁾고 경고하고 있다. 제25차 한·미안보회의(SCM)의 공동커뮤니케(1993년 11월 4일) 제4항에서도 “대한민국에의 어떠한 무력공격에도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미국의 신속하고 유효한 지원은 확고하다고 표명하고 있다.”⁵⁾

요컨대 북한의 핵문제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한다. 핵문제의 전문가가 아닌 필자로서는 핵무기나 핵개발 상황 그 자체보다도 이 글에서 북한 핵개발로부터 파생되는 정치적, 전략적, 정책적 함의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조명해 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3가지 “神話” 또는 필자가 생각할 때 그릇된 인식, 사고, 행위를 지적해 보고자 한다.

둘째, 북한 핵문제를 놓고 상충하는 남북한 및 관련 대상국들의 입장을 점검·정리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위의 그릇된 인식의 극복과 남북한 및 관련국가들의 입장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북한 핵문제의 해결방안 및 대응책을 모색·제시하고자 한다.

II. 북한 핵을 둘러싼 3가지 神話

첫째로 북한 핵문제를 “우리식”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안이한 사고방식이다. 사실은 북한이 바로 “우리식 사회주의” 논리를 공식적으로 고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논리 또는 객관

4) *The Korea Times*, 1993년 7월 10일. 클린턴의 미사일 재비치 경고는 *The Korea Herald*, 1994년 1월 16일자서 인용.

5) 영문 전문은 *Korea and World Affairs*(Winter 1993) pp. 782~785 참조.

적인 합리적 선택이 곧이 곧대로 북한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북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오류라고 본다. 그 구체적인 보기가 “당근과 채찍” 접근전략이다. 먼저 당근과 채찍은 두개의 별도의 “이것이나 저것이나”라는 전략이 아니고 그 語源에 의하면 당나귀 목에 건 채찍 끝에 당근이 달려 있어서 채찍이 쏘고 당근은 從이라는 것부터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북한의 전략과 정책이 이른바 사회주의 필승·불패원리에 입각, 현사태를 일시적인 곤경으로 보고 체제고수·보호(System-defensive) 차원에서 국내외 상황변화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응·대처해나가는 관국(Muddling through)에 선불리 북한의 체제개혁·개방(System-reform)을 가정한 우리의 정책대응이나 접근, 심지어는 북한체제의 붕괴 또는 대체(System-replacing or collapsing)를 가정한 우리의 접근전략은 큰 낭패를 초래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비단 북한 핵문제 뿐만 아니라 북한문제 전반을 둘러싼 논쟁을 진보·보수라는 허울로 매도해서는 안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현실과 실상에 기초한 정책접근인 현실주의(實事求是)와 우리식 대로 북한의 새모습을 그리면서 우리식 대로의 북한변화를 추구하겠다는(“新”字를 붙이던 말던) 이상(낭만)주의로 구분·구별되어야 하는 근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북한의 일련의 정책·전략적 돌변(유엔동시가입, 합영법, 외국인 투자법 등 제반법령 개정, 두만강개발계획 추진, 남북한 기본합의서, 남북비핵화선언, 대미·일 접촉 및 핵문제 의견접근 등)은 북한체제고수 차원의 전략·전술적 변화(System-defensive moves)로 보아야지, 이를 체제개혁·개방 차원의 변화(System-refoming changes)로 성급하게 진단하는 것은 금물이

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북한이 긍정적으로 응하면 당근을, 불응하면 채찍이라는 단순 양분적 정책접근이 아니고 채찍 즉 만반의 준비와 강력한 대응책이 준비된 상황에서 당근(유인·유화정책)을 준다는 정책적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더구나 서구식 당근·채찍전략에 한국적인 “널뛰기 개념”도 보완되어야만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비단 핵문제 뿐만 아니라 남북한 문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우리나라 전통적인 민속 널뛰기 놀이와 같이 양쪽이 서로 조절·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당근만 일방적으로 주어도 낭패가 되고, 채찍질만 퍼부어도 파국으로 가게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대와 맞서야 하기 때문에 채찍-당근전략에 널뛰기 개념도 그 보완전략으로 유념해야만 되겠다.

둘째로 북한 핵문제가 남북한 관계개선, 북한과 미·일 관계개선 및 수교와 직결되어 있고 더 넓게는 1995년 5월 연장예정으로 되어있으며 160개 회원국으로 늘어난 핵확산금지조약(NPT)에의 중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현재 국제적 차원에서도 가장 큰 위협·위기의 하나로 부상되었고, 또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보도된 대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진전이 있다고 해서 곧 당장 萬事가 형통한다는 式의 단순논리도 금물이다. 북한 핵문제는 연극에 비유하자면 5막 7장 가운데 1막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아직도 넘어야 할 山, 건너야 할 江이 많고 험난하다. 따라서 북한 핵 뿐만 아니다. 북한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돌발·돌변사태에 항상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길고 험한 “長征”으로 생각하는 여유와 준비, 끈기와 인내, 장기목표, 중·단

기 목표, 현안해결을 위한 목표 등의 구분도 더욱 중요하다. 핵이라는 제1막이 잘 풀려서 끝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중대한 긍정적 진전이다. 그러나 그 뒤에도 북한의 미사일 문제(MTCR), 화학생방무기(CWC, BWC), 인권, 이산가족문제 등 근본적인 북한의 체제 개혁·개방 이전의 현안들만도 산적해 있지 않는가? 더구나 새시대·새물결에 적응·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 등소평式의 개혁·개방정책이 북한의 현 김일성-김정일 체제하에서 가능할 수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회의가 앞선다. 따라서 북한의 핵문제해결은 설령 양쪽이 만족스럽게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모든 문제의 해결인양 떠드는 단순성 낙관론도 금물이다. 북한 핵문제도 남북한 관계개선도 단숨에 단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끝으로 북한은 80년대 중반 이후 공산주의의 몰락이라는 국제정세의 大변혁기를 맞아 그들이 얘기하는 “국제혁명역량”이 최악의 상태에 이른 것은 아무도 부인하기 힘든 엄연한 객관적 현실이다. 김일성 자신도 올 신년사에서 “지난 해에 우리 공화국을 고립, 질식시키고 우리의 사회주의의 위업을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은 전례없이 악랄하게 벌어졌으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정세는 극도로 침체화되었습니다”⁶⁾라고 밝히고 있다. 또 그는 이유와 핑계는 밖으로 돌리고는 있지만, 제3차 7개년계획(1987~93)의 실패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제3차 7개년계획기간에 우리는 예상치 않았던 국제적 사변들과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조성된 침체한 정세로 하여 경제건설에 커다란 난관과 장애에 부딪쳤지만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거대

6) 김일성 신년사, 통일속보 제94-1호, 1994년 1월 4일.

한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⁷⁾라고 시인했다. 1993년 12월 8일 조선노동당 6차 중앙위 제21차 전원회의에서도 제3차 7개년계획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공식 인정했다. 〈표-1〉, 〈표-2〉, 〈표-3〉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3차 7개년계획기간 동안 평균 7.9% 성장률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로는 -1.3% 라는 마이너스 성장 결과를 낳았고, 이는 1990년 이래 계속 심화되어 온 마이너스 성장률을 잘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분야별 목표와 실적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북한경제의 어려움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따라서 북한이 현재 안고 있는 극심한 경제적 곤경, 핵문제를 계기로 더욱 심화된 국제적 고립은 거의 실증이 가능한 객관적인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당면한 경제적 공황과 국제적 고립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 해석하여 북한이 곧 당장 붕괴한다는 성급한 결론이나, 나아가서는 북한을 앞잡아 보고 만만한 상대로 대하려는 안이하고 단순한 사고, 그러한 사고에 근거한 접근전략정책도 또한 위험천만이라는 것이다. 물론 정책입안·집행자의 입장에서서는 현재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북한에 발생할 수 있는 內因에 의한 自爆(implosion)이나 핵문제 등 外壓에 의한 괴멸(explosion) 또는 內外因의 복합작용에 의한 자폭·괴멸의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는 없다.⁸⁾

7) 위의 글.

8) 북한 출지 붕괴론과 반영구 잔존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은 줄저, 「북한정치연구」(서울: 박영사, 1993), pp. 365~373 참조 바람. 북한의 implosion과 Explosion의 가능성에 관한 언급으로는 Robert A. Manning, "The Asian Paradox Toward A New Architecture," *World Policy Journal*(1993), pp. 55~64 참조.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을 유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이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것을 항상 大前提로 깔고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전략적·정책적 과오를 범할 수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만 보아도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연례 전력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정규병력이 111만명에 예비전력이 500만이나 된다. 더구나 스커드미사일개발(노동1,2,3호)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정거리가 500Km, 1,070Km, 1,500Km로 비단 한반도 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위협요인으로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이 공격용 러시아 잠수함 4척 이외에도 추가로 10척을 더 구입하기로 합의했다는 최신 언론보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⁹⁾ 물론 문제는 새시대정신을 거역하는 비생산적이고 호전적인 군사정책과 전략을 북한이 언제까지 버티어 나갈 수 있느냐에 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현 주체혁명사상으로 무장한 김일성-김정일체제가 환골탈태의 새사고로 전환, 새전략 정책을 수용할 수 있느냐로 귀결된다. 이러한 본질적 변화의 두 기준은 현 청산리방법·주체농법에 의한 협동농장제도를 깨고 등소평집권 이후의 중국과 같이 가족농단위로 脫집단농장화(Decollectivization of agriculture)가 시작되어야 하고, 산업 역시 독립채산제, “선택적 개방”, “주체적 대외개방” 등 이른바 大門을 열지 못하고 들창문만 열겠다는 式의 뻔질만 계속하면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밑바닥에 깔고 대안사업체계 기업소 관리운영방식을 깨고 민영화(Privatization), 사기

9) *The Military Balance, 1991-1992*(London: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1992), pp. 167~168. 북한의 러시아 잠수함 구입보도는 동아일보, 1994년 1월 17일.

업화(Privatization of industry), 시장화(Marketization)의 方向으로 대체되는 것이겠다.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은행법”, “화폐개혁” 등 이곳 저곳 땀질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체제수호(System-defense) 차원을 넘어 체제개혁·개방(System-reform)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현 김일성-김정일 체제가 견재하는 限 청산리방식·대안사업체계 즉 집단농장방식과 계획경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私農化, 民營化, 市場化로 전환할 수 없다는 딜레마가 있다. 이러한 복합적 상황하에 있는 북한을 만만한 상대로 보거나 우리식 대로 안이한 단순논리로 상대하는 것은 큰 낭패를 자초하게 된다.

요컨대 북한핵 뿐만 아니라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대북접근 전략과 정책에 있어서 적어도 3가지 오류, 잘못된 인식, “神話”는 불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이른바 “우리식 사고”를 무시·경시한 채 우리식 사고로 북한을 이해·설득할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 핵문제 해결이 곧 만사형통·만병통치인양 착각하는 것, 북한을 대수롭지 않은 상대로 얕잡아 보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에게 북한은 적어도 통일이 실현될 때까지는 단순히 적도, 동지도, 동반자도 아니고 적, 동지, 동반자라는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히고 얽힌 어렵고 만만치 않은 숙명적인 상대다.

III. 북한핵과 관련 국가의 입장

〈기술적인 문제〉

북한핵을 둘러싼 관련 국가 또는 국제기구(특히 IAEA)의 입장

을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기술적 문제가 정리되어야 하겠다.

첫째,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김영삼 대통령을 통해 북한이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한편 미국정부는 두 가지 견해가 아직 결말을 못 내고 있는 상태다. 미중앙정보부(CIA), 국방정보부(DIA), 국가안보회의(NSA), 전력부(Department of Energy)은 이제까지의 자료와 정보를 종합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유일하게 미국무성 정보연구국(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Department of State)은 이에 異議를 제시하고 있는 상태다.¹⁰⁾ 핵무기개발 추측의 근거는 북한 영변핵시설이 1989년 100일 동안 중단된 상황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양이며 그 분량으로 보아 핵폭탄 하나나 두 개 정도를 만들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¹¹⁾

그러나 핵폭탄 有無에 관한 미정부內 異見 뿐만 아니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는(추정하는) 핵폭탄의 數도 한개에서 여덟개까지 의견이 크게 상충한다.¹²⁾

최근 필자가 입수한 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10)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December 27, 1993; *The New York Times*, January 9, 1994, A, 8.

11) David Sanger, *The New York Times*, January 9, 1994, A, 8.

12) 정영태, “북한 군사정책의 전개 양상과 핵정책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3-11), pp. 101-103. Gary Milhollin은 “북한은 여섯개에서 여덟개 원자폭탄을 만들수 있는 핵무기 물질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주장 했다. 그의 “North Korea’s Bomb,” *The New York Times*, June 1992 참조.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은 *IHT*, 1993년 12월 29일자에 보도되었다.

Research Institute)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1970년대부터 핵무기개발계획을 추진해 온 것으로 보고 현재 영변에 5MW 원자로(Reactor)를 가동하고 있고 플루토늄 분리공장도 건설중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 이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수백톤의 핵무기용 연료(irradiated reactor fuel)를 추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小플루토늄 원자로를 가동하여 연간 한개의 원자폭발물(nuclear explosive)을 만들수 있는 핵연료를 생산하는 것 같다고 보고 있다. 이 원자로는 1980년에 시작, 1987년에 가동되었고, 1950년대 기술로 그레파이트식 개스냉동방식이라는 것이다. SIPRI 보고에 의하면 현재 수준으로는 연간 4~6Kg의 무기용 플루토늄을 생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근에 더 큰 50MW 원자로가 건설중이며, 1995년 완공예정이라는 것이다. 이 정도의 원자로라면 연간 40~60Kg의 무기용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태천에도 북한은 200MW 원자로를 건설중이며, 1996년에 완공하면 연간 200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은 영변에 길이 180m에 수십층 플루토늄 분리공장을 건설중인데 현재로는 80% 공정에 40% 시설이 완성된 상태이고, 아직 불확실하나 1995~97년이면 완공될 것 같다고 SIPRI는 전망하고 있다. 또 1991년 말까지 小원자로에서 5~10Kg의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995년 말이면 20~35Kg으로 증가하게 된다고 추정한다. 더구나 위의 大型원자로가 가동되면 연간 250Kg 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해진다고 본다. 그리고 영변의 플루토늄 분리공장이 완공되면 1995년 말까지는 4~7개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양을

축적하게 되고, 지금 예정대로 북한의 위의 핵시설이 진행된다면 2000년에 이르면 수백 Kg의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보유하게 될 것 이라¹³⁾라고 전망하고 있다.

요컨대 북한 핵문제는 핵무기 보유 有無문제보다도 그 규모나 숫자는쟁으로 전개될 정도로 심각한 현실이다.

둘째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핵무기개발의 개념문제가 제기된 다. 클린턴은 1993년 11월 7일 “북한이 핵폭탄을 개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North Korea cannot be allowed to develop a nuclear bomb”)고 했는데 이는 잘못 발언한 것으로 인정하고 북한이 핵세력(Nuclear Power)이 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정정했다.¹⁴⁾ 이 修訂발언은 미국무장관 위렌 크리토퍼의 1993년 12월 20일 발언 “우리는 결코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용납 할 수 없다”(“We in no sense are tolerating a nuclear program in North Korea”)¹⁵⁾는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북한의 핵폭탄 소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경우에는 만약 북한이 현재 이미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결론이 나면 핵폭탄을 제거해 야 하는 부담이 따르지만, 북한이 핵세력이 되는 것이나 핵개발프 로그램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는 북한이 핵개발을 중지하 는 것만으로도 충족될 수 있다는 큰 뉘앙스와 정책·전략접근에 차 이가 드러난다.

셋째로 현재 잠정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진 7개 신고시설물에 대

13) 보다 상세한 것은 David Albright, Frans Berkhout and William Walker, *World Inventory of Platanium and Highly Enriched Uranium 1992*(SIPRI,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pp. 173~175 참조.

14)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994년 1월 7일 사설.

15) *IHT*, 1993년 12월 20일자서 引用.

한 IAEA 정규통상사찰문제다. 북한은 1回用이라고 주장하고, 또 1993년 11월 11일 북한 외교부 제1부부장 강석주는 북한이 NPT 탈퇴를 일방적으로 일시적으로 유보한 상태에서 “안전지속성의 보장과 안전협정에의 완전준수”(“The guarantee of continuity of safeguards and full compliance with the safeguards agreement”)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주목된다. 즉, 이는 IAEA에 의한 사찰을 완전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넌지시 우기고 있는 것이다.¹⁶⁾ 북한 주장을 들어주는 경우에는 과연 1회 사찰로 북한핵시설물 감독·감시가 끝날 수 있는가? 더구나 IAEA가 1회 사찰을 한 경우, 의문점이 해소되기는 커녕 더욱 의문점이 증첩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¹⁷⁾

끝으로 이른바 “일괄타결방식”(“Package deal”)의 개념을 둘러싼 同床異夢, 吳越同舟 현상이다. 북한이 예기하는 이른바 일괄타결방식(“formula of package solution”)¹⁸⁾속에는 팀스피리트훈련 영구중단, 남한내 미군핵기지공개, 핵선제불사용보장(핵위협과 적대정책철회) 등이 있고 또 이러한 어려운 현안들을 북한 핵시설물 사찰과 동시에 타결하자는 주장이고, 前야당 당수인 김대중씨가 내놓은 일괄타결방식은 先북한 핵투명성보장, 後남북 및 북·미/북·일관계(수교) 개선이고, 한승주 외무장관이 1993년 방미중(1993

16) Report by the Director-General of IAEA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DPRK and The IAEA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in Connection with the NPT, December 1993, pp. 57~58 참조. 전문은 *IFANS Review*, vol. no. 3 (December 1993)에 수록됨.

17) Chung Min Lee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의 “North Korea’s Nuclear Endgame,”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January 4, 1994.

18) 위의 IAEA Report p. 58 참조.

년 3. 23~30) 내놓은 일괄타결방안은 역시 북한의 NPT복귀와 특별사찰수용조건으로 ① 핵사찰을 남북한 군사기지로 확대 ② 팀 스피리트훈련의 명칭, 장소, 규모변경을 통한 축소·조정 ③ 북한에 대한 핵위협제거 ④ 경제협력확대 ⑤ 북한과 한·미·일간 관계개선 등 이름만 “일괄타결”이지 그 내용들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더구나 일괄타결방식은 북한이 오랫동안 대남전략용어로 남북관계개선을 위해서 보다는 거꾸로 남북관계개선을 회피하려는 속셈으로 사용해 온 것인데 굳이 같은 단어를 그 내용과 의도가 다른데 서로 쓰는데서 오는 혼란·혼동은 피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물론 한·미정상회담(1993년 11월 23일)에서 “일괄타결”용어 대신 “광범위하고 철저한”(Broad and thorough)접근이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또 포괄적 접근(Comprehensive)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위의 혼란을 피하는데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김영삼대통령의 이와 관련 기자회견 발언은 “We will make thorough and broad efforts to bring the issue to the final solution”).¹⁹⁾

〈북한의 입장〉

북한은 핵문제 당사국이다. 먼저 북한은 왜 핵무기개발을 서둘렀을까 하는 질문이다. 1970년대 중반에 이르면 북한이 남한과의 모든 경쟁에서 뒤처지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망이 더욱 흐린

19) 김대중의 일괄타결안은 그의 *Korean Reunification*(Clare Hall University of Cambridge, 1993), pp. 79~92 참조. 한승주 외무의 일괄타결안 내용은 전성훈, “북한 핵문제의 현황과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세미나 시리즈 93-12), p. 25서 인용. 김영삼-클린턴 회견내용 영문 전문은 *Korea and World Affairs*(Winter 1993), pp. 765~771 참조 바람.

상황에서 핵무기개발이 중요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북한경제가 1970년대부터 남한에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기 시작, 1990년에 이르면 남한경제규모의 1/10정도로 왜소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재래식군사경쟁, 군사비지출에서도 한계에 도달했고, 핵무기개발은 북한 현 김일성-김정일체제 수호차원의 궁극적 무기로 등장한 것이다.²⁰⁾ 그러나 이를 막기 위한 IAEA, 한국, 미국, 일본의 설득·압력과정에서 북한은 핵무기개발계획이 나름대로의 대외정책카드로 되고 있다는 것을 곧바로 터득하고 최대한 이용해 온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NPT탈퇴선언(93년 3월) → NPT탈퇴 일방적·일시적 유보(93년 6월) 등 이례적인 전격돌출행위를 자행하면서 시간벌기, 미국과의 대화의 틀 마련, 벼랑끝을 달리는 위기·극한정책(Brinkmanship)도 불사하면서 홀로서기·버티기를 해오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은 무엇을 얻었고 또 무엇을 잃었는가? 먼저 핵개발계획을 나름대로 추진해 왔다면 10개월 이상의 시간을 벌었다. 또 한국이 개입하지 않는 미국과의 직접대화의 틀을 그동안 만들었다. 더구나 북한이 주장해 온 이른바 IAEA의 일방성(편파성)과 불공정성, 미국의 핵위협과 목조르기정책 포기 등의 양해를 얻는데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핵문제를 구실로 북한이 이제까지 주장해 온 일괄타결방식을 한국, 일본, 미국 등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한 셈이다.

20) 필자의 출처 *The North and South Korean Political System: A comparative Analysis*(Westview, Fothcoming), pp. 695~740 참조. 그리고 정영태, 앞의 글 참조 바람.

그러나 그동안 북한은 홀로서기, 버티기, 벼랑끝 줄다리기를 하면서 시간을 벌기도 했지만 또 북한과 대미·일 관계개선이 지연되고 남북한 관계 및 협력도 교착상태에 빠짐으로서 시간을 그만큼 잃은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북한의 체제모순이나 정책의 경직성, 무모성, 비합리성, 전략의 저돌성을 국제사회가 터득하게 되고 앞으로 북한이 그같은 정책과 전략을 고집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그 유효성이 떨어지고 더욱 큰 한계와 더욱 두터운 벽에 부딪치게 된다는 것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 극적인 표증이 바로 북한 핵문제 추구를 위한 제48차 유엔총회 결의안의 표결결과가 아닌가 싶다.²¹⁾

더구나 북한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핵개발의 강행이고, 핵카드를 이용한 대미·일 관계개선 및 수고라면 결코 이 두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핵개발을 고집, 계속 홀로서기, 버티기, 벼랑끝 돌출행위(Brinkmanship)로 파국 → 파멸의 길로 치닫거나, 일단 핵투명성을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새국제질서·국제사회에 동참하는 길, 크게 두길이 있다. 문제는 현 체제를 고수하는 차원이 아니고 체제개혁·개방이라는 최소한 중국식(등소평式) 개혁·개방도 현 김일성-김정일 체제가 단행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등소평 개혁·개방정책이 76년 모택동-주은래 死後, 화국붕 과도기를 거쳐 70년 末에서야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북한에 등소평 같은 개혁·개방 인물이 不在한 것도 큰

21) 제 48차 유엔총회는 IAEA의 북한핵시설 사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993년 11월 1일 뉴욕에서 찬성 140, 반대 1(북한), 기권 9(앙골라, 중국, 큐바, 가나, 기니아, 이라크, 말리, 세네갈, 베트남)으로 통과시켰다. 결의안 영문 전문은 *Korea and World Affairs*(Winter 1993), pp. 778~780 참조.

문제이지만), 현 김일성 부자체제가 건재한 상황하에서, 더구나 위에서도 지적한 청산리방법-주체농법, 대안사업체계경영방식에 본질적인 변혁이 없는 형편에서, 즉 私農化, 民營化, 市場化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환경속에서는 위의 두번째 토끼도 끝내는 잡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첫번째 토끼(핵무기개발)도 두번째 토끼(체제개혁·개방)도 끝내는 잡을 수 없는 자기모순속에 빠져 북한은 지금 어찌면 또다른 시간(김일성의 권력퇴장, 그것이 死亡이든 다른 방식이든)을 병어리 냉가슴 앓듯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하나의 문제는 內因에 의한 自爆(implosion)이나 外壓에 의한 폭발(explosion) 또는 두 복합작용에 의한 체제붕괴가 자꾸 가까워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북한은 언제까지 이러한 위의 딜레마속에서 홀로서기, 버티기, 벼랑끝 돌출행위를 지속할 수 있느냐로 귀결된다.

〈남한의 입장〉

북한이 핵을 개발하여 사용능력이 있는 경우, 그 제1차적 피해 대상국은 대한민국이다. 또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평화적·非군사적 해결방법이 소진되고, 경제제재 나아가서는 일련의 군사조치·행동으로 까지 escalate 하는 경우의 제1차적 피해·희생 대상국도 한국이 된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 핵개발도 막고 또 이를 북한이 끝내 거부하는 상황에서 한반도가 다시 군사대결의 場이 되는 것도 막아야 하는 二重 부담을 안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저지시킬 수 있는 이른바 보상(Rewards)수단

(경협, 자본기술지원, 투자 등)은 어느 정도 갖고 있으나, 북한이 끝내 불응하는 경우에 제재(punishment)할 수 있는 능력은 크게 제한되어 있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 여기에 바로 한국정부가 핵문제를 적극적으로 국제 이슈화(IAEA, 유엔안보리, 총회 등)하고 미국이 전면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이면에서 적극 협조가 되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근거가 있다(북한핵문제 그 자체가 국제적 이슈인 것은 불문에 붙이더라도).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유화·민주화·시장경제화에 바탕을 둔 한반도통일이라는 대야망을 실현해야 하는 민족적 과제를 한국정부는 항상 짊어지고 있으나, 현 남북한 상황하에서 설령 북한이 줄지에 붕괴되어 서독식 흡수(병합)통일이 되어서도 안되겠다는 또 하나의 통일이상과 통일정책사이의 모순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북한이 스스로 풀어야 할 최소한의 자체혁신, 정책전환 즉 핵개발포기와 투명성보장, 미사일 개발 및 수출포기, 화생방 무기 제조 및 파기(남한과의 CBM 협상과정을 통해), 이산가족 및 인권 문제, 자유총선, 다당제·복수후보선거제도 도입 등을 공식조건으로 내놓고, 이러한 문제들에 긍정적 접근이나 변화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호응·협력하고, 근본적 변화 없는 상투적인 선동·선전전략을 고집하는 경우는 선의의 무관심(Benign neglect)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물론 대결보다는 대화가 훨씬 바람직하다. 따라서 비생산적이고 말싸움·입씨름만을 위한 대화라도 대화는 계속하겠다는 의지와 인내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또 하나의 기다림(김일성의 권력퇴장)은 역시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유에서 기다림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

미국은 탈냉전·공산국가붕괴이후 유일한 군사 안보 최강국으로서, 그리고 영국·러시아와 함께 핵확산금지조약(NPT) 첫 발기인 국가로서, 핵확산금지의 궁극적인 파수꾼이라는 책임을 갖고 있다. 더구나 160개 NPT 회원국 가운데 북한이 최초로 도전장을 내놓은 상황과 1995년 3월로 예정된 NPT연장을 놓고 나름대로 북한과 시간싸움을 벌리고 있다. 부시 당시의 미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이었던 Brent Scowcroft와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리처드 하스(Richard Haas)가 최근 뉴욕타임즈지에 기고한 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의 대북한, 한반도 정책은 ① 한반도에서 분쟁은 막아야 하고 ② 그러나 아세아에 북한의 핵무기가 등장해서 지역안정을 위협하는 새로운 핵경쟁도 막아야하는 역시 두개의 상반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²²⁾ 따라서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의혹을 판명하고 핵개발을 지지하는 것이 모종의 군사조치 없이도 가능한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더구나 민주개방국가인 미국은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정부내 이견, 불협화음 뿐만 아니라 미국내 여론의 강경·온건 노선논쟁도 무시할 수 없고 경청·존중해야 하는 열린사회의 부담도 있다. 최근 미 칼럼니스트 찰스 크라우트햄머(Charles Krauthammer)가 미·북한간 IAEA 7개 신고 시설 사찰 잠정합의안을 미국의 북한에의 일방적인 항복이라고 맹비난²³⁾ 한 것이나, 칼렌 하우스(Karen House)가 클린턴의 북한핵문

22) 이들의 기고는 “Foreign Policy Near a peril point,” *The New York Times* January 5, 1994.

23) 그의 칼럼은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anuary 7, 1994.

제를 케네디의 큐바미사일 결정, 레이건의 유럽 퍼싱II 미사일 배치 결정, 부시의 이라크 걸프전 결정과 비유, 강경대응론을 주장²⁴⁾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가 미국 또는 우리에게 큐바미사일 사태만큼이나 증차대하다는 데는 동의할 수 있으나, 당시 큐바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다르고 당시의 관련 국가들과 현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주변 관계국들과의 관계로 너무나도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하겠다.

미국은 또한 북한 핵문제가 최악의 사태로 치닫는 경우 결정적인 채찍(군사수단)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면서도 또 그것을 선불리 휘두를 수도 없다는 큰부담을 안고 있다.

더구나 미국은 유일 핵 강대국으로서, 핵 소유국으로서, 유일 핵 사용국(일본 히로시마·나와사키)으로서 북한 핵개발 설득에 있어서 도덕적 취약점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도 비단 북한 뿐만 아니라 남한, 일본, 대만 등 아세아 국가들의 핵개발 의지나 능력도 저지해야 하고, 이미 핵보유국인 중국·인도 그리고 핵보유국으로 의심 받고 있는 파키스탄 등의 핵확산도 막아야 하는 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최근 보도된 1991년 남북한 간 이른바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한국측에 미국이 “조약화”를 종용했다는 것도 한·미간 물밑 불협화음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대목이다. 마찬가지로 파키스탄의 신임총리 부토가 첫 외국방문길을 북한을 택한 것의 정치적·군사적 합의도 제3세계 핵개발 특히 회교권 국가들의 핵개발 움직임과 북한의 공조체제라는 차원에서 보면 NPT에의 중

24) Karen House의 “Korea Clinton’s Cuban Missile Crisis”는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January 6, 1994.

대한 도전이요 이는 또한 미국의 부담으로 직결된다.

요컨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에서 한·미간, 나아가서는 일본과도 공동인식을 하고 있으나 그 궁극적 목적, 동기, 현안중요성의 측정 등에서 서로 다르고 다를 수 밖에 없다는 또 하나의 숙제가 깔려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의 입장〉

일본은 한반도 과거사의 부담 때문에 북한 핵문제를 놓고 적극적인 행위자가 될 수 없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한편 핵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북한에의 보상, 경제원조, 자본 기술지원 등에서 가장 중요한 주변국가라는 강점을 갖고 있다. 더구나 북한이 핵개발을 강행하거나 IAEA 또는 남북한 동시 사찰을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 그 첫 단계가 될 수 있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한 북한해외(재일본) 자금·자산동결 북한 해외자금 유입 금지 조치 등이 집행되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일본 친북한 조총련계 자금(한 보도에 의하면 재일본 조총련계 짜짱꼬 수입이 연간 3,000억불이며, 그 가운데 약 10억불이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본다),²⁵⁾ 즉 년 600억불에서 10억불까지로 추산하는 북한에의 자금유입을 중단·차단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 더구나 북한의 미사일 개발(노동 1호, 2호, 3호)로 일본전역이 그 사정거리에 들어감으로써 핵과 미사일, 나아가서는 핵적제 미사일 공격 위협을 받게 된다는 남한과 더불어 일본도 북한핵의 제1차적 핵피해 대상국이 됨으로써 결

25) Richard P. Lawless, "Tokyo's Ties to Pyongyang's Threat,"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December 29, 1993.

코 팔짱만 끼고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미국과의 협의하에 일본에 패트리엇 미사일망 구축을 서두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은 남한보다도 상대적으로 북한에 줄 수 있는 당근(대북 배상금, 자본·기술·지원·투자 등)도 많고 또 채찍(조총련계 자산 자금동결, 대북 자금 유입통제금지 등)도 더 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 핵투명성 확보에 있어서 미국·중국·러시아와 더불어 일본의 협조와 공동노력은 필수적이다.

〈중국의 입장〉

중국은 비단 북한 핵문제 뿐만 아니라 북한 현 체제의 존립 자체에 있어서도 외적 마지막 기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남북한과 동시 수교가 되고 대남한 교역규모가 100억불 규모로 확장세에 있는 상황에서 이념·전쟁동지 즉 唇齒 관계의 혈맹이라는 옛 친구 북한과 새로 일구는 친구 남한이라는 한반도의 두 카드를 안보·경협 등에서 이용하는 호기를 최대한 누리며, 이른 한반도의 “不統不亂”이라는 중국식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동북아지역의 유일한 공식 핵 보유국으로서, 더구나 핵보유국간의 핵실험자제를 무시하고 1993년 핵실험을 강행한 나라로서, 중국의 북한 핵실험능력에는 도덕적 한계와 모순이 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이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 나아가서는 비핵지대화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포기를 종용할 것이며, 중국식의 북한 개방·개혁도 권장하겠지만 과연 현 김부자체제가 견재하는 한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는 큰 의문이다. 최근 이만섭 한국 국회의장의 중국방문, 미

부시 전 대통령의 강택민 등과의 접촉, 미 샘년상원군사위원장 방한·방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외교위원장 황장엽의 중국방문과 김일성 중국 방문예정설, 러시아 프리마코프정보부장 및 미 CIA 울시국장 극비방한, 김영삼 대통령의 일본·중국·러시아 방문계획 등도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주변국가들의 움직임 차원에서 흥미할 수 있다.

아무튼 북한핵 문제가 유엔안보리에 가기 전에도, 안보리에 상정되어 제재가 가해지는 상황에 이르러서도 중국은 가장 중요한 Wild Card인 것임에 틀림없다고 본다.

〈러시아 입장〉

러시아는 처음부터 북한 핵시설과 기술지원, 원자기술자 교육·훈련 등의 제1차적 당사국으로서 원초적 책임과 부담이 크다. 또한 미국·영국과 함께 NPT 발의 국가로서 1995년 3월 NPT연장에 적극 동조해야 한다는 국제적 공조책임도 있다. 그러나 국내 정치·경제 불안과 불안정으로 북한 핵개발 중지에 동조하는 역할이 외에 주변 4국 가운데는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가장 약하고 감소된 상황이다. 물론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북한과 최근에도 러시아 핵잠수함 판매계약을 맺는 등 긍정적 또는 부정적 불장난을 지금도 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절대로 과소평가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된다고 본다.

IV. 요약 및 몇 가지 제언

이 글에서는 북한 핵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먼저 3가지 잘못된 인식 “神話”를 깨는 것이, 신화로부터 깨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① 북한의 실상과 이른바 사회주의 필승불패 논리에 입각한 “우리식 사회주의” 전략과 정책을 무시한, 작게는 남한식 논리, 크게는 서구식 논리 - 합리적 선택 - 는 금물이라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른바 채찍 - 당근 논리의 본래의 의미가 현재로서는 곡해되어 있고, 바른 의미로서의 채찍 - 당근 접근전략에 우리 고유 민속놀이인 “널뛰기” 개념도 가미될 때 보다 나은 대북한 접근 전략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더구나 북한의 핵정책을 체제고수 (system-defensive) 전략으로 보아야지, 우리 나름대로 체제개혁·개방(system-reform)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큰 낭패라는 것을 강조했다.

② 북한 핵문제가 설령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단순논리는 금물이다. 미사일 문제(MTCR), 화학방무기(CW, BWC), 인권, 이산가족 등 현안문제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도입, 복수 후보·다당제 선거 제도하의 자유총선 등 아직도 건너야 할 강,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핵문제만 해도 아직 그 투명성이 보장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시련이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는 그것이 설령 해결된다 해도 연극에 비유하면 5막 7장 가운데 겨우 1막이 끝난다는 여유, 인내, 지구력이 요구된다. 북한 핵문제 뿐만 아니라 북한 관

계개선을 위한 접촉·접근 전략·정책전개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목표(자유화·민주화·시장화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실현), 중간목표(북한 자체내의 개혁·개방·체제변신, 공존협력기) 현안해결(핵투명성, 미사일통제체제, 이산가족문제 등)과제설정도 중요하고 또 내인에 의한 자폭(inplasion), 외압에 의한 피멸(explosion), 내인 외압 복합작용에 의한 돌발사태에 대비한 위기관리 체제준비도 중요하다. 북한의 핵문제는 통일이라는 장정의 가장 험준한 산맥 가운데 큰 봉우리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③ 북한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곤경, 국제적 고립을 필요 이상으로 과대평가한 나머지 만만한 상대로 얽잡아 보는 것도 금물이다. 우리에게 북한은 적어도 통일이 실현될 때까지는 단순한 적, 동지, 동반자라는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히고 얽힌 어렵고 만만치 않은 숙명적인 상대라는 것을 대북 접근에서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다음에 역시 4가지 기술적 문제를 제기해 보았다.

①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다. 여기에는 한국과 미국 등 관련국들간의 이견, 미국내 부처간 이견이 있고, 또 핵무기개발용 플루토늄양, 핵시설물의 규모 등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다.

② 북한이 핵세력이 되는 것을 막는 것과 북한 핵폭탄을 개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 뉘앙스가 크다. 북한 핵폭탄의 소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경우는 북한이 이를 소유하고 있다고 결론이 나면 그것을 제거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지만, 북한이 핵세력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의 경우는 북한 핵개발 중지만으로도 그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③ 북한이 NPT를 일시적·일방적으로 탈퇴를 유보한 입장에서

“안전 지속성의 보장과 안전협정에의 완전준수”를 구별하여 IAEA가 요구하는 사찰을 완전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년지시 우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이는 IAEA를 상대적으로 격하시키고 한국도 배제하면서 미국과의 직접대화만을 고집할 수 있는 구실과 근거도 제공해 준다.

④ 일괄타결 방식개념을 둘러싼 혼란·혼동이다. 한국 외무장관의 일괄타결(package deal), 북한의 일괄타결방식(formula of package solution), 김대중씨의 일괄타결 방안이 서로 다르다. 핵을 둘러싼 당사국 논리, 주변국 논리 등이 제각기 다른 것도 지적될 수 있다.

북한의 경우는 궁극적으로 두 마리 토끼(핵개발 강행과 체제개혁·개방)를 다 현 김부자체제로서는 잡을 수 없다는 딜레마 때문에 또 다른 기다림(김일성의 권력 퇴장)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남한의 경우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중단시킬 수 있는 보상 수단도 없고, 결국 핵개발을 강행하는 경우에 제재능력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과, 더 본질적으로는 민족적 대과제인 통일실현의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북한의 줄지붕괴는 또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통일이상과 통일정책전개의 괴리를 극복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따라서 북한의 또 다른 기다림(김일성 퇴장)을 남한도 함께 해야 하고 또 그러는 동안은 서두르지 않고 원칙에 결연하고 북의 상투적 선동·선전에 부화뇌동하지 않는 선의의 무관심(Benign neglect)이 요구된다.

미국은 NPT의 integrity를 지켜야 하는 부담, 북의 핵도전을 분쟁아닌 설득으로 해결해서, 동북아 핵군사경쟁을 막아야 하는 부

담, 핵최초사용국, 핵거대 보유국으로서 북한을 포함한 약소국의 핵개발 의욕을 저지해야 하는 부담 등을 안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같이 북한 핵개발의 제1차적 피해 희생대상국으로서의 위협, 북핵 설득수단, 비군사적 제재 방법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상대적 우위에 있다.

중국은 북한 체제존립의 궁극적 외적기동이자 핵문제가 유엔안보리로 가기 전에, 유엔안보리로 간 뒤에도 가장 중요한 Wild Card를 쥔 주변국이다.

러시아는 처음부터 북한 핵개발의 기술·교육·시설·자본 지원국가로서의 책임부담을 안고 있으나 주변 4국 가운데 현재로서는 자체국내 정치·경제 불안정으로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약하다.

요컨대 남한의 북한핵에의 대응방안은 위의 3가지 신화를 극복하고, 네가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바탕한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의 목적과 본질적인 딜레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북한핵 저지에의 비군사적 해결을 위한 보상수단과 최악의 사태에까지 이르는 경우를 상정한 제재능력들을 점검함과 동시에 우리의 보상수단과 제재능력도 준비·강화하는 단기·중기·장기계획과 북한돌변(implosion, explosion)사태에 대비한 위기관리체제 확립도 필요하다고 본다.

〈표-1〉 북한 경제계획 목표와 실적

(단위 : %)

	제1차 7개년계획 (1961-67)	6개년계획 (1971-76)	제2차 7개년계획 (1978-84)	제3차 7개년계획 (1987-93)
목 표	14.6	10.3	9.6	7.9
실 적	8.6	6.0	4.5	(-1.3)

자료: North Korea News, no. 716, January 3, 1994

〈표-2〉 북한 경제성장률

년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평균
비 율	3.3	3.0	2.4	-3.7	-5.2	-7.6	-1.3

자료: 〈표-1〉과 같음.

〈표-3〉 북한 경제 각부분별 목표량과 실적(1992)

부 분	전 기	석 탄	철 강	비철금속	화학비료	프라스틱	시멘트	섬 유
목표량	100 billion KW/h	120 million tons	10 million tons	1.7 million tons	7.2 million tons	0.5 million tons	22 million tons	1.5 billion meters
실 적	24.7 billion KW/h	29.2 million tons	5.98 million tons	0.49 million tons	3.51 million tons	0.15 million tons	12,02 million tons	68 million meters

자료: 〈표-1〉과 같음.

北韓 核問題 解決을 위한 戰略的 選擇과 協商對策

全 星 勳

民族統一研究院 責任研究員

目 次

- | | |
|-----------------|------------------|
| I. 서론 | III. 향후 한국의 협상대책 |
| II. 기존정책에 대한 검토 | IV. 결론 및 전망 |

I. 序 論

舊蘇聯의 와해 및 東歐 공산정권의 몰락과 더불어 과거 반세기 간 지속되어 온 냉전체제가 종식됨으로써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국제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핵·세균·화학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라크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제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 조치 강화 노력, 「화학무기금지협정」(CWC)의 체결, 「세균 및 독성무기금지협정」(BTWC)의 검증조항 보강을 위한 논의 등에서 대량살상무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국제환경속에서 북한의 IAEA 사찰 거부와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및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비핵화 공동선언) 불이행 등으로 대표되는 북한 핵문제

는 범세계적 핵확산금지체제의 유지와 남북한 관계개선에 위협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된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대북한 협상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비핵화 공동선언」 체결 이후 지금까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채택된 3가지 대표적인 정책들이 북한의 핵투명성을 증대시키고,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며,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한국의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하는 점을 고찰하겠다. 둘째, 과거의 정책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대북한 협상대책 수립시 한국의 고려사항과 전반적인 협상대책을 제시하고 아울러 상호사찰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신하여 북한 핵문제의 전개방향을 전망하고 특사교환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II. 기존정책에 대한 검토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관련 당사국들이 취해 온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상호사찰 협상에서 한국의 성역없는 특별사찰 실시 주장, 韓·美 양국의 1993년도 팀스리트 훈련 재개 및 IAEA의 특별사찰 촉구 결의안 채택 등을 들 수 있다. 향후 한국의 협상대책을 논하기에 앞서 북한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고 현재도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아 있는 이들 3가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1. 한국의 특별사찰 주장

남북한은 1992년 3월 14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곧이어 상호사찰 규정 마련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다. 남북한은 1993년 1월 25일까지 13차례의 핵통제공동위원회 전체회의와 8차례의 위원접촉 및 1차례의 비공개 위원장접촉을 가졌으나, 사찰대상 및 사찰방법과 관련한 침예한 의견대립으로 인해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다.

북한은 「의심동시해소원칙」에 의거하여 영변의 핵시설만 공개하되 남한의 주한미군기지를 중점적으로 사찰하려는 반면, 한국은 「상호주의 및 성역없는 사찰 원칙」에 의거하여 북한의 군사기지도 사찰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남북한이 사찰대상 선정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찰방식에 있어서도 북한이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전면동시사찰을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24시간 사전통보하에 신속히 실시하여 기습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특별사찰 방안을 제의하고 있다.

성역없는 특별사찰로 요약되는 한국의 사찰제도는 군비통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사찰제도에 속한다. 그러나 자국의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한국의 사찰방안은 협상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24시간이라는 단기간의 사전통보하에 군사시설에 대해 실시되는 특별사찰의 실제 파급효과에 대해 한국측의 엄밀한 분석이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검증에 관련된 모든 제안은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행위 및 시설에 대한 공개와 감시

를 의미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똑같은 공개와 감시가 제안측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증의 딜레마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1980년대초 미국과 舊소련간 중거리핵미사일 폐기협상에서 미국은 검증에 소극적인 소련에 대응하여 협상전략 차원에서 강력한 현장검사체제를 제의하였으며 소련 당국은 물론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개혁과 개방정책에 편승하여 검증에 대한 사고의 변혁을 가져 온 고르바초프가 미국의 제의를 수락할 의사를 보이자, 현장검사에 의한 민감한 군사시설 노출이 국가안보에 미칠 여파를 우려한 미국은 스스로 제안을 철회한 적이 있다.

한국이 제안하는 사찰제도는 이상적인 측면이 강하며 실현가능성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무리 완벽한 사찰이 실시되더라도 북한 전역을 손금보듯이 훤히 들여다 보면서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한국의 군비통제 추진방향이 군사적 신뢰를 구축한 후에 군비축소를 논의하자는 점진적 입장이라는 점과 검증도 하나의 신뢰구축방안으로서 상호신뢰가 구축되어가는 과정에서 그 적용폭과 심도가 자연스럽게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이 제안하고 있는 특별사찰 제도는 한국의 군비통제 추진원칙과도 일관되지 않는다.

2. 1993년도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팀스피리트 훈련은 북한의 남침위협에 대비한 한·미 양국의 대응훈련이라는 정치·군사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왔으나 남북대화에는 커다란 장애물이었다. 북한은 팀스피리트 훈련에 대해 강한 거

부감을 보여왔으며 훈련이 진행되는 기간중에는 거의 모든 남북대화가 중단되었다. 1992년 10월 차기년도 훈련 재개를 결정했을 때 당시의 한·미 양국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력이 핵문제 해결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은 예상과는 반대였다.

북한은 팀스피리트 재개 결정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남북핵통제 공동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북한은 남북한 군사당국자간에 가설하기로 합의한 직통전화 설치를 거부하였으며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과 분야별 공동위원회 개최도 거부하였다. 북한은 이후 개최된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에서도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단을 촉구하였으며 한국이 1993년 1월 26일 팀스피리트 훈련의 재개를 공식 발표하자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마저 중단하였다.

팀스피리트 훈련은 최근들어 군사·정치적 측면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남북한 재래식 전력의 균형은 한국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그간 GNP의 25% 이상을 국방비에 투자해 왔으나 한국이 경제규모에서 월등히 앞서있기 때문에 실제 국방비 지출액에 있어서는 한국이 북한의 2배 정도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한 군사력의 격차는 점차 좁혀지고 있으며,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냈던 메네트리(Louis Menetrey) 장군도 1989년 “현재의 기조가 유지된다면 1990년대 중반에 한반도에는 주한미군 없이도 안정이 달성될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¹⁾ 더욱이 북한은 油類 등의 부족으로 인

1) Andrew Mack, “North Korea and the Bomb,” *Foreign Policy* (Summer 1991), p. 98에서 인용.

해 군사훈련의 규모와 빈도를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십만의 병력과 첨단무기가 동원되는 팀스피리트 훈련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보다는 군사적 안정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여진다.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팀스피리트 훈련의 재개는 북한체제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자 하는 북한정권내 실용주의자들의 입지를 상당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1992년 10월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었고 북한 핵문제도 더욱 미궁으로 빠져들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3. IAEA의 대북한 특별사찰 결의안

IAEA는 북한의 최초보고서 내용과 자체 분석 결과간의 “중요한 불일치”(the significant inconsistencies)를 해명하기 위해 재처리 후 핵폐기물 저장소로 믿어지는 영변소재 2곳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들 시설이 순수한 군사시설로서 IAEA의 사찰대상이 아니며 IAEA가 공정성을 상실한 채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IAEA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 결의안 채택은 과연 현명한 결정이었나? 물론 IAEA는 핵안전협정에 의거하여 북한에 대해 특별사찰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EA의 결정은 북한을 자극하는 전술적 실수였으며 결과적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에 엄청난 어려움을 야기시켰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미 북한과 IAEA는 1993

년 봄에 5MW 원자로의 연료봉에 대한 샘플 채취를 실시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한 상태였으므로 IAEA는 적어도 5MW 원자로의 샘플을 채취할 때까지는 특별사찰 문제를 거론하지 말았어야 했다.

IAEA가 판단하고 있는 “중요한 불일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재처리후 폐기물 저장소로 의심되는 2곳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과 5MW 원자로 연료봉 샘플의 채취·분석은 거의 같은 기능을 한다. 그것은 5MW 원자로의 연료봉 샘플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이 제출한 원자로 운전기록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원자로의 실제 가동기간과 핵폐기물 생산량 및 실제로 추출된 플루토늄의 총량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IAEA가 북한과 합의한 연료봉 분석에 앞서 성급하게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고집하여 북한 핵문제의 유엔안보리 상정까지 초래함으로써 핵문제를 둘러싼 상황이 불필요하게 악화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핵문제를 ‘서둘러’ 유엔안보리에 회부했다는 북한의 주장²⁾도 일면 타당한 것이다.

그러면 왜 국제원자력기구가 특별사찰에 대한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일까? 아마도 IAEA는 「또 다른 이라크」가 등장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사찰마저도 실패한다면 IAEA라는 기구의 존재가치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체제유지를 위해 핵을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IAEA가 당시 팀스피리트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처한 어려움을 간과했을 가능성도 있다.

2) 북한 외교부 성명, 「로동신문」, 1993년 4월 6일.

어쨌든 한국의 성역없는 특별사찰 실시 주장, 1993년도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및 IAEA의 특별사찰 결의안 채택은 북한을 필요이상으로 자극하는 결정이었으며 북한 핵문제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하시킨 정책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III. 향후 한국의 협상대책

1. 협상대책 수립시 고려사항

향후 북한 핵문제에 대응하는 한국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이 현재까지 추진해 온 핵무기 개발 현황, 즉 북한의 총체적 핵능력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북한 핵문제의 전개과정을 검토해 볼 때, 북한 정권의 호전성과 체제 유지의 절박성 등을 근거로 해서 북한의 핵개발 필요성이 부각되고 핵능력에 대한 평가가 과장되었던 측면이 있다. 아울러 북한은 핵문제를 체제유지와 경제난 타개를 위한 對美 협상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양에 대해서는 첩보위성 등을 통해 북한 핵능력에 대한 판단을 주도해 온 미국내에서조차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3년 2월 24일 울시(James Woolsey) CIA 국장은 북한이 “최소한 1개의 핵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핵물질을 생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증언한 바 있다.³⁾ 이

3) USIA Wireless File,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March 2, 1993, p. 23.

에 대해 부시행정부의 고위관료나 미국내 핵전문가들은 올시국장의 평가가 최악의 가정에 근거한 것이라는 이의를 제기하였다.⁴⁾ 중국과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에 대해 공식적인 평가를 유보하고 있다.⁵⁾ 러시아 정부관계자들의 평가는 북한이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⁶⁾ 한국의 안기부는 북한이 최

4) 예를 들어 스코크로프트(Brent Scowcroft) 전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은 부시행정부의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 현황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었으나 그렇다고 올시 CIA 국장이 증언한 것처럼 핵무기 1개를 만들 만한 플루토늄을 생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1993년 3월 4일 *U.S.A Today* 기자회견 발언, 「한국일보」, 1993년 3월 6일. 미국 카이네기 재단의 핵전문가인 스펙터(Leonard Spector)도 올시 국장의 발언은 최악의 가정에 근거한 것이며 자신은 북한이 핵무기 1개를 만들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KBS 9뉴스 인터뷰」, 1993년 3월 17일. 애스핀(Les Aspin) 국방장관은 1993년 12월 북한이 현재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확실히 증명할 만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1993년 12월 10일. 가장 최근의 CIA 보고서(「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는 북한이 이미 한개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50% 이상이며 최대 12Kg의 플루토늄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Stephen Engelberg and Michael Gordon, "North Korea likely to have developed own atomic bomb, CIA tells President," *New York Times*, December 26, 1993.

5) 오코노기(Masao Okonogi) 교수는 북한이 1987년부터 5MW 원자로를 가동하여 1~2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폐기물을 생산했을지라도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재처리 기술을 완성하고 핵무기의 실제 사용단계에 근접했다는 주장에는 불확실한 점이 많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Masao Okonogi, "North Korea's Withdrawal from NPT and Japan's Stand", 서울신문사 정경문화연구소 주최 국제학술토론회, 1993년 4월 9~10일, p. 6 참조. 일본의 일부 핵전문가들은 현상태에서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원조없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1992년 12월 1일 동경에서 필자와의 비공개 인터뷰.

6) 러시아 대외정보처의 프리마코프(Yevgeny Primakov) 국장은 1993년 1월 북한이 상당히 발전된 핵기술을 갖고 있으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Korea Herald*, January 30, 1993. 대외정보처 대량살상무기통제국장인 예프스타피예프(Gennady Evstafiev) 중장은 1994년 1월 14일 국제적 압력과 핵개발에 따른 과도한 비용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 계획이 현재로서는 동결상태

대 21~24kg 정도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최악의 가정에 근거한 판단이라고 보여진다.

각종 정보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한의 핵능력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직접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IAEA만이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악의 가정에 근거한 대처방안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과거 부시행정부와 달리 핵무기 확산에 대한 클린턴행정부의 정책이 상당히 변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정책변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舊소련의 해체 후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START I 조약」의 비준과 NPT 가입을 미룬 채 핵무기 보유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었다. 부시행정부는 이러한 우크라이나에 대해 압력을 가하며 핵보유 포기를 종용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의 강압적 태도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반발하였다. 그러나 클린턴대통령은 부시의 對우크라이나 정책을 수정하여 압력보다는 협력과 제후를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결국 1994년 1월 14일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는 1,800개의 핵탄두를 모두 해체하는 조약이 체결되었다.⁷⁾ 이와같은 미국의 정책변화가 2차례의 북·미 협상을 성사시킨 중요한 배경이며 북한이 성의를 보일 경우 북·미 협상의 전도가 어둡지 않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비보유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 「東亞日報」, 1994년 1월 15일.

7) *Korea Herald*, January 15, 1994.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구성하려는 미행정부의 움직임도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 핵문제는 「핵무기 확산 방지」라는 관점에서 주로 다루어졌으나 보다 거시적으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구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⁸⁾ 클린턴행정부 출범 이후 제창된 「신태평양공동체」 구상은 개방된 경제, 민주주의 가치의 공유 및 집단안보협력체제 구축 등 정치·경제·안보상의 3원칙을 중심축으로 하고 있다.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경제적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대한 군사·정치적 영향력 확보가 필수적이거나 북한의 핵무장은 남북대결구조의 심화, 일본의 핵무장 촉발 및 동북아의 군비증강을 유발함으로써 미국의 새로운 아·태정책을 크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북·미 회담은 단순히 핵비확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동북아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포괄적인 아·태정책의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일본의 신행정부가 북한 핵문제 해결여부에 관계없이 국교 정상화 회담을 재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호소카와 총리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북·일 수교가 가능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나⁹⁾, 하타 외상이나 북·일 수교회담 일측대표인 데쓰야 대사의 발언에서¹⁰⁾ 일본이 양국간 수교회담

8) 黃炳憲, “美「北·美협상」亞州정책 결렸다,” 「문화일보」, 1993년 7월 20일.

9) 「朝鮮日報」, 1993년 11월 6일.

10) 「世界日報」, 1993년 11월 10일; 「한겨레신문」, 1994년 1월 7일.

재개에 강한 집착을 갖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따라서 북·미 회담에서 어떠한 돌파구가 마련되면 일본은 매우 적극적으로 북·일 수교회담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정부의 북·일 관계개선 움직임은 미국 정부에도 영향을 주어 현재 진행중인 북·미회담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북한이 대남 적화야욕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남북한 국력 및 앞으로의 추세와 한반도 주변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이 과거보다는 좀 더 자신감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보수나 감상의 극단적인 통일논의를 모두 배제하고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공영할 수 있는 실용적 관점에서 남북한 문제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한국의 협상대책

이상의 요인들을 감안할 때,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국은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은 북한의 핵개발 의도보다는 능력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현재 논의중인 사찰방안을 개선하는 것이다. 한국의 성역없는 특별사찰 제도는 신뢰가 부재한 남북한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실현가능성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물론 북한도 이에 상응하여 「의심동시해소원칙」에 의거한 사찰주장을 철회해야 한다.

둘째, 팀스피리트 훈련을 비롯하여 한반도에서 실시되는 군사훈련은 남북대화의 여건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적절히 규제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1994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은 북한이 현재 문제되고 있는 7개 신고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을 수용하면 중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훈련에 대한 규제는 남북한이 군사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군사훈련의 통보 및 통제에 대한 신뢰구축방안을 합의·실천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셋째, 한국은 2곳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보다는 5MW 원자로의 연료봉 샘플을 충분히 채취·분석함으로써 북한의 핵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협상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별사찰 문제는 그 성격상, 기술적 문제라기 보다는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5MW 원자로의 연료봉 샘플 분석이 이루어지면 2곳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문제는 IAEA와 북한이 체면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타협점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이 표방해 온 「先핵문제해결, 後경제협력」의 연계정책은 그동안 많은 논란의 대상이었으며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성공적인 정책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이 7개 신고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을 수용한 이후 남북대화가 재개되는 것을 계기로 기업인의 방북과 기초적인 경제협력을 허용함으로써 남북대화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남북한의 핵문제는 핵개발 여부를 감시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이후까지를 염두에 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상호 협력하는 차원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지금은 북한의 핵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핵사찰 문제에 모든 논의가 집중되고 있으나 북한이 IAEA의 사찰을 수용하고 상호사찰이 실현되면 남북한의 핵문제는 보다 건설적인 관점에서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즉 북한의 풍부한 천연우라늄 자원과 남한의 우수한 핵기술을 서로 융합하여 민족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남북한이 협력해야 한다. 북한이 북·미 협상에서 제기한 경수로 전환 지원 문제도 남북한간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3. 남북한 상호사찰

남북한 상호사찰 협상은 북한이 7개 신고시설에 대한 IAEA 사찰을 수용하고 제3단계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2곳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문제가 논의되는 시기를 전후하여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점에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약화되고 국제적 공조 분위기도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남북한 상호사찰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구태여 한국이 상호사찰 문제를 다시 제기함으로써 남북한간에 새로운 긴장과 갈등을 야기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상호사찰 자체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온 북한에 대해 한국이 강력한 상호사찰 실시를 요구함으로써 사찰협상이 다시 난항을 겪을 경우, 한국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적 견해가 제기될 수 있다.

셋째, 남북한이 상호사찰 규정에 합의하더라도 상호사찰과 IAEA 사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설혹 약간의 차이점이 있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사찰협상의 어려움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에 대한 의문, 즉 상호사찰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¹¹⁾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상호사찰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가. 상호사찰의 필요성

상호사찰의 필요성은 남북관계 차원, 韓·美관계 차원 및 IAEA 사찰의 보완 차원 등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1) 남북관계 차원

「비핵화 공동선언」의 제4항에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사찰 실시는 남북한의 의무사항이다. 만약 상호사찰이 실시되지 않는다면 「비핵화 공동선언」은 死文化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국이 상호사찰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비핵화 공동선언」은 그대로 두고자 한다면 각 조항간 형평성이 문제될 것이며, 특히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한 북한의 재처리시설에 대한 규제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인 동시에 남북한의 문제이므로 국제적 차원에서 IAEA 사찰이 필요하다면, 남북한 차원에서 상호사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남북한은 상호사찰의 독자성을 확보하여 한반도 문제를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한다는 선례를

11) 이점은 상호사찰과 IAEA 사찰이 사찰의 대상, 방법 및 기술 측면에서 상당부분 중복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남북한 상호사찰은 국제적 이목이 집중된 북한 핵문제에서 「남북한 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과 우리의 자주성을 견지함으로써 향후 통일을 위한 남북협력의 모든 단계에서 국제사회의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남북한이 평화적 핵이용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상호사찰은 필수적이다. 원자력 산업분야에서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북한 핵시설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여부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남북한이 평화적 핵이용에 대한 교류·협력을 실천하기 위해서 상호사찰을 통한 원자력 산업의 상호공개가 필요한 것이다.

(2) 韓·美관계 차원

이라크의 경험을 통해 IAEA 사찰의 한계를 절감한 미국은 「비핵화 공동선언」에 의거한 상호사찰체제를 국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훌륭한 모델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은 핵확산이 우려되는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체제를 수립한다는 기본구도하에 상호사찰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이 상호사찰 실현을 포기할 경우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을 둘러싸고 한·미 및 북·미간에 마찰이 예상된다. 또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상호사찰 수용을 중용할 가능성이 크며,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상호사찰 실현의 중요한 촉진요인이 될 것이다.

(3) IAEA 사찰의 보완 차원

IAEA 사찰제도가 갖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은 상호사찰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IAEA의 사찰은 핵물질과 직접 관련있는 핵연료 저장소, 원자로 등 제한된 시설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으며 핵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통제소나 기타 부대시설에 대한 사찰은 불가능하다.

둘째, 우라늄 광산이나 정련시설은 사찰대상이 아니므로 IAEA 사찰은 핵연료주기를 완전히 달성한 북한에 대해서는 적합한 사찰 제도가 아니다.

아울러 IAEA 사찰과 상호사찰의 대상이 중복되더라도 상호사찰의 경우 동일한 언어와 감각을 가진 같은 한국사람이 사찰을 실시하고 관련자들과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제3국인이 파악할 수 없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

나. 상호사찰 추진방안

남북한 상호사찰이 IAEA 사찰보다 강화된 효과적인 사찰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남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현실성이 있어야 하므로 쌍방은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기존의 무리한 요구를 철회함으로써 협상타결을 촉진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성역없는 특별사찰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남한에 핵무기 배치를 전제로 한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전면동시사찰 주장과 핵무기 배치에 대한 과거기록 공개주장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 상호사찰은 기본적으로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하여 실시하고 군사기지에 대한 사찰은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실시될 수 있다는 원칙을 설정해야 한다.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남북한 상호사찰은 과학적·기술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정치성이 배제됨으로써 합의가 용이할 것이다.

상호사찰이 IAEA 사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실현되어야 한다.

첫째, 사찰대상지역에서 사찰관의 보다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IAEA 사찰관의 접근이 금지된 시설에 대해서도 사찰이 허용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이 상당량의 천연우라늄 자원과 정련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찰대상을 확대하여 우라늄 광산과 정련시설 및 옐로우 케익(yellow cake)도 사찰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재처리시설로 밝혀진 북한의 방사화학실험실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하며 폐기전까지 상주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은 방사화학실험실이 재처리시설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1992년 5월 영변을 방문한 블릭스(Hans Blix) IAEA 사무총장에 따르면 방사화학실험실은 공장규모의 재처리시설에 해당된다. 따라서 「비핵화 공동선언」이 발효된 현재에도 방사화학실험실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은 「비핵화 공동선언」의 명백한 위반이다. 방사화학실험실의 폐기 여부는 북한이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IV. 결론 및 전망

1994년에는 핵무기확산금지체제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1995년에 효력이 만료되는 NPT의 기한연장 및 수정에 대한 협상이 재개되고 이 과정에서 현재 NPT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간의 논쟁이 가열될 것이다. 미국은 NPT의 무기한 연장을 위해 「핵실험 전면금지조약」(CTBT)을 체결하여 핵비보유국의 불만을 무마하면서 북한과 같은 NPT 체제의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단속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분위기속에서 북한의 핵문제는 금년에도 국제적 주요 현안으로 국내외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향후 북한 핵문제 해결의 관건은 현재 진행중인 북·미 고위급 회담의 성패에 달려 있다. 북한이 7개 신고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을 수용하고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3단계 북·미 회담이 개최되고 여기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철저하고 광범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 미국은 공히 마지막 순간에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지난해 6월 이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쏟은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을 원치 않을 것이다. 결국 협상의 「가속도」(momentum)가 붙은 북·미 회담은 이번이 발생하지 않는 한 결렬될 가능성이 희박하며 따라서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일정 수준의 타협점을 찾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해 본다.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북한 핵문제가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

는 최대 현안으로 등장한 나머지 핵문제만 해결되면 남북관계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나갈 것이라는 성급한 기대감이 우리사회에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나친 기대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냉철한 판단에 장애요인이 될 뿐 아니라 실현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남북한간에 특사교환이 이루어지더라도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특사교환시 핵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한국의 의도와 달리, 북한은 1994년도 김일성 신년사 등을 통해 핵문제는 미국과 해결할 문제라고 단정함으로써 특사교환시 핵문제보다는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등 다른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사교환시 북한 핵문제가 논의되더라도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기대할 수는 없다. 특사교환에서 현재 상호사찰 협상의 쟁점 사항들에 대한 정치적 합의 도출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핵통제공동위원회를 재개하여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특사교환의 의의는 그동안 핵문제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고위급회담과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정상가동하는 데 두어져야 할 것이다.

설혹 핵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북한체제의 개방속도와 수준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폐쇄체제인 북한의 변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북한 지도부는 남한과의 급속한 협력보다 남북간에 어느 정도의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향후 권력승계 및 김일성 사후의 안정적 체제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柳 錫 烈

外交安保研究院 教授

目 次

I. 北韓의 핵개발 상황
II. 북한 핵사찰의 실상

III. 對美 핵협상 추진전략
IV. 남북한 관계의 현황과 전망

I. 北韓의 핵개발 상황

1992년 6월 이후 93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실시된 IAEA 임
시사찰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즉 IAEA가 북한의 핵시설을 사찰한 이래로, 북한은 더 이상 핵개
발을 사실상 진전시킬 수 없었을 것이며, 특히 플루토늄을 追加的
으로 추출해 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IAEA가 북한 핵시설을
감시하는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고 봉인장치를 했으므로 IAEA
의 감시를 따돌리고 원자로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빼내어 플루토늄
을 추가 생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 상
황은 IAEA 사찰 이전에 추출한 플루토늄을 가지고 핵무기화를 하
고 있을 의혹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핵무기가 갖는 엄청
난 파괴력에 비추어 북한이 비록 적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
라도 우리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북한의 핵개발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엇갈리고 있다. 그

러나 많은 미국의 분석가들은 북한이 이미 최소한 핵폭탄 1개에 해당하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북한은 핵폭탄의 핵심 재료인 플루토늄 제조를 위한 필요 시설을 모두 갖추고 플루토늄을 추출한 바 있다. 특히 영변 핵시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는 거리가 먼 핵 재처리 시설 등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일괄 공정을 갖추고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첫째, 고질적인 경제난으로 남한과의 승산 없는 군비경쟁보다는 핵개발 추진으로 군사적 우위를 계속 확보하려는 것과 둘째, 소련 및 동구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심각한 체제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1986년 영변 5MW급 원자로에 연료봉을 장착한 이래 한번도 연료를 교체한 적이 없으며 단지 손상된 연료봉으로부터 한차례 90그램의 플루토늄을 생산한 바 있다고 신고한 바 있었다. 그러나 IAEA는 타다 남은 연료봉, 추출한 플루토늄, 핵폐기물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실제로 최소한 89~91년에 걸쳐 3차례 이상의 재처리를 실시하여 플루토늄을 추출했음을 밝혔다. 또 핵심 의혹지역인 영변의 미신고 시설 2곳은 하나는 핵폐기물 저장소이고, 다른 하나는 재처리 공정에 있는 방사능 물질저장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¹⁾ 현재 IAEA는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의 양이 g단위가 아니라 Kg단위로 보고 있으며, 국내외의 정보를 종합하여 보면 대체로 7Kg 이상 22Kg미만으로 추정된다. 이는 핵폭탄 1~3개 제조분량인 것이다.²⁾

1) 「중앙일보」, 1993. 7. 25.

2) Ibid.

핵폭탄 제조에 충분한 플루토늄의 확보가 군사적 목적으로 바로 연결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것이 사용가능한 실용적인 핵무기로까지 발전되었는가는 별개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군사적 목적의 운반이 가능할 정도로 탄두를 소형화하는 기술적 난관이다.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소수의 견해도 불구하고, 안기부, 과기처, 원자력연구소 등 전문가들의 평가는 북한의 핵개발이 매우 진전된 단계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핵무기 자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형 탄도 미사일 계획은 핵탄두 적재를 염두에 둔 것이 명백하며 북한정권은 현재 탄두를 소형화하는 일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³⁾ 만약 북한이 제조해낸 핵탄두가 스커드 B형 미사일이나 사정거리 1,000Km 노동1호에 장착될 경우 남한 전역은 물론 일본 동부지방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 사실에 대해서 경시해도 안되겠지만 지나치게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칫 그들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 될 것이다.

II. 북한 핵사찰의 실상

1992년 2월 남북간의 「한반도 비핵화」가 합의되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체결후 6년간이나 끌어오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에 조인하게 됨으로써 북한은 국제사회와

3)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은 93. 5 동해에서 발사된 「로동1호」는 히로시마 원폭의 3배이상의 핵탄두 장착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96년 실전배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아사히 신문」 1994. 1. 12.

한국에 대하여 사실상 핵무기개발 포기선언을 한 셈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핵통제 공동위」를 두어 사찰규정을 마련하여 92년 6월까지 남북 상호핵사찰을 실시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21차례에 걸친 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의도적 공전(空轉) 정책으로 상호사찰의 실현은 요원한 실정이다. 또한 IAEA는 6차례에 걸친 임시사찰을 실시한 결과 핵폭탄의 핵심원료인 플루토늄을 상당량 확보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북한은 이에 대한 IAEA의 확인요구를 거절하면서 93년 3월 「핵확산 금지조약」(NPT) 탈퇴라는 초강경 대응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북한의 NPT 탈퇴로 빚어졌던 긴장상황은 2단계에 걸친 미·북한 고위급회담을 갖게 했으나 회담이 예상외로 장기화되고 핵문제 해결은 여전히 불투명하게 되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열린 IAEA와의 핵협상에서 사찰의 불공정성을 개선할 것을 주장함에 따라 북한과 IAEA와의 핵협상은 별다른 진전없이 9월 3일 끝났다. 이에 따라 9월 22일부터 열린 IAEA 이사회에서는 북한의 태도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IAEA 총회에 넘겨, 총회는 10월 1일 북한이 핵안전협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열린 총회는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44개국이 공동제안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2, 반대 2, 기권 11로 통과시켰다. 결의안 채택을 반대한 나라는 북한과 리비아 2개국이며 중국은 기권했다.⁴⁾

4) 「한국일보」, 1993. 10. 3.

이어 11월 1일 개최된 유엔총회는 IAEA 의장국인 호주를 비롯, 한국, 미국, 영국, 러시아 등 48개국이 공동 발의한 북에 대한 핵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150개국 투표중 찬성 140, 반대 1(북한), 기권 9의 절대 다수로 채택했다.⁵⁾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 미국과 몇차례의 뉴욕 실무 접촉을 갖고 그동안 평행선을 그어오던 핵시설 사찰대상과 범위, 그리고 3단계 고위급회담 일정에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미국과의 접촉에서 지난해 11월 20일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내 7개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을 받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북한은 7개 시설중 5천 KW급 실험원자로와 핵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 실험실 등 2개 핵심시설에 대해서는 봉인장치 확인 및 카메라 필름 교체는 허용하되, 사찰재개는 IAEA 협상팀 입국 이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⁶⁾

미·북한 실무접촉에서 북한은 이와 같이 7개 핵시설 사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지만, 이러한 사찰협회가 곧바로 북한핵 문제의 긍정적인 해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북한핵의 해결을 위한 3단계 회담 준비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3단계 회담에 가서야 비로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 될 것이다. 따라서 IAEA 사찰이 1회에 그칠 것인지, 정기적으로 할 것인지 또 북한이 특별사찰을 받을 것인지 하는 것은 미·북한 3단계 또는 그 이상 단계의 회담에서 논의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또 미·북한 핵실무 협상에서 IAEA의 전면적 사찰

5) 「조선일보」, 1993. 11. 2.

6) 「조선일보」, 1993. 11. 20.

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IAEA에 신고한 7개 핵시설 가운데 2개소에 대한 사찰에는 난색을 표명하고, 북한이 지금까지 추출한 플루토늄량을 측정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실험 원자로의 연료봉에서 샘플을 추출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이다.⁷⁾ 더욱 중요한 문제는 신고하지 않은 2개 핵폐기물 보관장소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을 북한이 수락토록 하는 것이 남아 있는 것이다.

앞으로 북한과의 핵협상은 「핵문제 3~4월전 매듭」을 예상하는 북경의 소식통에도 불구하고⁸⁾ 예상외로 오래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재 한·미의 입장은 미·북한 협상을 통해 대북 임시 또는 통상사찰을 실현시키고 3단계 회담에서는 사찰 관련 합의내용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4단계 회담에나 가서야 핵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사찰과 남북한 상호사찰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의 입장은 이미 약속한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되도록 지연시키고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추진시키는 것이다.⁹⁾ 결국 북한은 「일괄 타결·동시실천」의 방식에 따라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함께 미국의 도움으로 당면문제를 풀자는 것이다.

III. 對美 핵협상 추진전략

1. 「일괄합의·동시실천」

대미관계에서 북한의 고민은 북한의 핵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7) 「아사히신문」, 1994. 1. 8.

8) 「조선일보」, 1994. 1. 16.

9) 「한국일보」, 1994. 1. 17.

다해도 미국이 관계정상화의 조건으로 인권문제를 포함한 북한내부의 변화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은 「일괄합의·동시실천」 방식이 아니라고는 미국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은 1단계 미·북한 고위급회담 이전부터 양국 공동관심사의 「포괄적 협의」를 주장했으며, 1단계 회담 공동성명에서 핵사찰 문제를 「정책적 문제」의 일부분으로 취급한 것은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주장한 「일괄합의·동시실천」 원칙을 미·북한관계에서도 고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¹⁰⁾

북한은 1단계 협상에서 「일괄합의·동시실천」 방식에 따른 ① 핵무기 불사용 보장, ② T/S 훈련의 영구중단, ③ 주한미군기지 공개, ④ 對韓 핵우산 제공 중지, ⑤ IAEA 공정성 보장, ⑥ 북한 사회주의 체제 존중 등을 한꺼번에 요구하고 나섰으며, 특히 미·북한회담을 핵문제에 국한시키지 않고 미·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정치회담으로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을 감안, 미국은 2단계 제네바 회담 당시 핵문제에 진전이 있을 경우 미·북한 관계개선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협의할 3단계 회담을 두달 후인 9월 20일까지 갖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스크바주재 북한대사 孫成弼은 7월 22일 “핵문제를 비롯한 朝·美간에 제기되는 문제들이 신중한 토론을 거쳐 근원적으로 해결된다면 양국간의 국교가 수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10) 「내외통신」, 제856호.

2. 비공개 접촉추구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전략 목적 추구를 위해서 비공개 접촉을 고수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1988년 12월 이후 미국과 북경에서 35차례 걸친 양측 참사관급 비공식 접촉을 가져왔으며 회담 내용을 공개치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1992년 3월 15~19일 북한외교부 미·일 담당국장 孫洛雲이 워싱턴을 비밀리에 방문, 미국무부 당국자 및 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접촉 수준의 격상을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1992년 6월 27일 玄俊極 「로동신문」 책임주필도 방일시 「요미우리 신문」과의 회견을 통해 “북경에서의 참사관급 접촉 이외에도 비공식 접촉이 진행중이며, 정세가 완만히 변하면서 돌연 질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¹¹⁾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은 1992년 1월 22일 캔터 미국무차관과 가진 미·북한 고위급 회담과 금년에 개최된 제1~2단계 고위급 회담에서 비공개 단독 회담을 가졌던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또 북한은 지난 9월말부터 미국과 4차례에 걸친 비공개 교섭을 갖고 「T/S 훈련취소와 미국이 북한을 외교적으로 승인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¹²⁾ 이어 북한은 지난해말 미국과 5차례에 걸친 비공개 뉴욕실무 접촉을 갖고 핵사찰과 3단계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의견을 조정했다.

11) 「로동신문」, 1992. 6. 27.

12) 「조선일보」, 1993. 6. 13.

3. 「變則的 3者會談」追求

1979년이래 북한은 한·미가 공동으로 제의한 3당국 회담을 거부하면서 미국과 먼저 단독평화 협정을 합의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한 후에 통일문제 토의를 위하여 남북대화를 하는 「변칙적 3자 회담」을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제1단계 미·북한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은 “군사(핵)문제는 미국과, 민족문제는 남한과”라는 변칙적 3자 회담의 원칙 밑에서 미국과는 핵문제를 협의하고 남한과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통일문제 해결을 내세웠다.¹³⁾

제2단계 회담에서도 북한은 핵문제를 포함한 쌍방사이의 문제들에 대한 남북회담을 재개하는 한편, “경수로 도입문제를 포함하여 핵문제 해결과 관련된 현안문제는 미국과 회담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미·북한 수교회담에 한국이 참여하여 수교회담 진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체제유지 보장과 수교

현재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입장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은 시간을 지연시키더라도 결국 핵사찰을 수락하고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시키려 할 것이다. 핵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북한이 시급히 필요로 하고 있는 일본과의 수교는 물론 한국과의 실질적 경험도 기대할 수 없고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신의 체제유지 보장과 함께 미국과 수교를 목표로 하는 북한의 전략과 북

13) 「조선일보」, 1993. 10. 28.

한의 핵문제 해결 및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언제, 어떻게 조화되느냐 하는 것이다.

93년 8월 2일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로동신문」 논평을 통해 북한은 “미·북 3단계 회담, IAEA와의 남북대화 성과 여부 등이 모두 미국, IAEA, 미국측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¹⁴⁾고 강조했으나 북한측이 이행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이것은 결국 「일괄합의·동시실천」 방식에 따른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동시에 북한이 요구하는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풀려야 한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개방을 통한 북한체제 와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계속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북한의 입장을 감안, 미국은 결국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함께 북한체제 존중밑에서 북한과 수교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현체제를 연장시켜주는 것이기도 하나, 장기적으로 볼 때 미·북한 수교는 북한개방을 촉진시켜 민주화를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IV. 남북한 관계의 현황과 전망

1. 남북대화

1993년 5월 20일 황인성 총리는 남북간의 핵문제와 남북한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5월 27일 고위급 회담대표 접촉을 갖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14) 「로동신문」, 1993. 8. 2.

이에 대해 북측은 5월 25일 남북정상회담과 현안해결을 위하여 통일담당 부총리급 특사를 교환하고, 이를 위해 차관급 실무접촉을 5월 31일 갖자고 제의했다.¹⁵⁾

북한의 특사교환 제의는 당시 북한이 처한 국제적 고립상황을 모면키 위한 것으로서 전략적인 제의였음이 분명하다. 첫째,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이후 NPT 복귀를 요구하는 국제적 압력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제재 및 압력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특사교환 제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5월 31일 남북이 실무접촉을 가진 뒤 부총리급 특사가 서울과 평양을 오가게 되면 국제적 압력은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밖에 없고 시간적으로 6월 12일의 시간을 넘겨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은 남한과 고위급 대화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를 채택, 발효시키는 동안에 북한의 체제위기적 상황을 잘 넘길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고위급 회담을 지속시키는 경우 북한의 체제 안보를 위협할 것이 분명하므로 북한은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라는 유인카드를 사용하여 특사교환을 통해 기존 고위급 회담의 틀을 깨고 남북합의서·비핵화 공동선언 등의 합의사항을 한꺼번에 사문화시켜 보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4월 8일 김일성이 제의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실현, 「접촉, 왕래, 대화를 통해 전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여 단합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대화를 추진하려 한 것이다. 5월 12일 노동신문은 남북대화과 관련 당국간 대화뿐만 아

15) 「동아일보」, 1993. 5. 25.

나라 각당·각과·각계·각층의 쌍무적 다무적 대화 즉, 「민간급 대화」의 진전을 강조했다.¹⁶⁾

셋째, 한·미간을 이간시키고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었다. 미국은 북한이 NPT에 복귀하지 않는 한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 밑에 핵우선 정책을 써왔는데 한국이 남북정상회담에 말려들어 핵문제를 제쳐놓고 북한과 대화를 지속하는 경우 한·미간에 마찰이 있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편 북한은 미국이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한국과의 대화를 추진함으로써 미국과의 대화에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을 감지하면서도 정부는 5월 29일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북한이 제안한 특사교환을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하였다. 정부는 차관급 실무접촉은 고위급 회담 대표접촉으로 하자고 하면서 6월 5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접촉을 갖자고 제의했다.¹⁷⁾

그러나 북한은 5월 31일 핵문제와 특사교환을 함께 논의하자는 태도를 취했으나 6월 2일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제의를 하자 또다시 태도를 바꿔 핵논의는 남북관계에서 불필요한 장애를 조성할 것이므로 특사교환만을 위한 실무협의를 하자고 주장했다. 정부는 북한이 6월 12일 미국과의 고위급 접촉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합의한 만큼 이와 병행하여 남북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북한의 요구를 과감히 수용했으나 북한은 「핵전쟁연습중지」와 「국

16) 「로동신문」, 1993. 5. 12.

17) 「조선일보」, 1993. 5. 29.

제공조체증지」를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대화에 응해 오지 않았다.¹⁸⁾ 그러던중 1993년 10월 2일 북한의 강성산 총리가 대남전통문을 통해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을 제의해옴에 따라 남북한은 4차례의 접촉(10. 5, 10. 15, 10. 25, 11. 4) 끝에 한때 특사교환 절차문제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기도 하였다.¹⁹⁾

그후 북한은 미국과 뉴욕실무 접촉을 갖고 의견을 조정하는 자리에서 IAEA와 핵협상을 시작할 것을 밝히면서도 한국의 특사교환 요구에는 일체 언급을 회피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해 12월 8일 개최된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무역제일주의」를 표방한 것은 핵문제를 조기에 마무리 짓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대미 수교나 내부사정 때문에 남한과 대화를 재개한다면 그것은 특사교환을 통한 남북정상회담 보다는 체제유지를 위하여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 기초한 연방제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북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 체제에 대한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남북한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연방제를 통한 통일밖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현상황에서 북한은 기본적으로 통일보다는 분단상태에서 체제유지를 추구하는데 한동안 역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맥락에서 금년도 북한은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보다는 미·일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여건조성을 위하여 남북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즉 남북대화는 미·북한간 대화의 종속 변수로 취급한다는 것이

18) 「중앙일보」, 1993. 6. 17.

19) 「조선일보」, 1993. 11. 4.

다. 따라서 3단계 미·북한 고위급 회담 진전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북한은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대화를 급속히 진전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북한의 현재 태도로 보아 특사교환이 실현될 경우에도 남북관계의 순조로운 발전과 획기적인 전기 마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오히려 특사교환 실현을 위한 대화의 진전을 이용하여 또 하나의 「남북고위급회담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2. 남북경제교류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 유관국들의 정책조정이 있을 경우, 남북경제교류는 타분야에 비해 활발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임가공 무역은 우리정부도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고 북한도 1992년 ‘외국인투자법’ 등을 제정한 것으로 미루어 앞으로는 더욱 활성화 될 것이 예상된다.

남북간의 경제교류는 먼저 교역에서 출발하여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나 노동력을 활용해야 교역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제교류는 우리 기업의 입장이 정부주도보다는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접촉을 주장하고 있어 북한도 민간차원의 경제접촉을 고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의 물자교류에 따른 대금결제는 청산결제 방식을 원칙으로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청산결제의 주체가 당국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것임에 반해 북한은 기업들간의 청산결제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공개된 북한의 개정헌법은 37조에 외국법인·개인과의 기업

합병과 합작을 장려한다는 조항을 신설,²⁰⁾ 자본주의 국가로부터의 외자도입의 길을 터 놓았으며,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우리측의 기업·개인도 적극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공세를 적극적으로 펼 것이다.

북한이 경제실무형인 강성산을 총리에 유임시킨 것은 당분간 고위급회담과 같은 분야보다는 외국인 투자유치 등 경제개방을 가속화해 나가려는 포석으로 보여 핵문제만 해결되면 남북경협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전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강성산 총리는 어디까지나 사회주의 이념의 테두리내에서 개방을 추구하는 당적 인물로 김달현으로 대표되는 실리 개방파와는 명확히 구분된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북한은 핵문제 해결후 개방에 대비하여 체제유지 및 강화에 역점을 두면서 당면 경제문제를 풀어갈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 경제개방은 사회전면 개방을 가져오게 할 중국식 모델을 따를 가능성은 희박하며 외부의 사상침투를 철저히 차단시키는 「북한식」 개방 모델을 추구할 것이 예상된다.

3. 남북 인적교류

1992년 남북간에는 고위급회담 세차례와 남북여성교류가 이뤄졌다. 남북경제교류를 위해 북한 정무원 부총리 김달현일행의 방한과 우리 남포조사단의 방북이 이뤄졌으며 특히 남북 기본 부속합의서 채택으로 인적 교류의 실무를 맡게 될 연락사무소가 비무장지대에

20) 「북한헌법의 주요 개정내용」, 외무부, 1992. 11, p. 27.

설치됨에 따라 공동위만 본격 가동되면 인적 교류가 활발해져 「자유왕래」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결국 북한핵, 이산가족 고향방문무산, 「남북조선노동당」 사건, 이에 대응한 한·미의 팀스피리트훈련 재개결정, 남북경제교류 보류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한 인적교류는 비관적일 수 밖에 없다.

한편 지난해 12월 8일 열린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경제정책의 실패를 처음으로 시인한 뒤 「무역제일주의」를 표방한 것은 남북교류를 포함, 경제개방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문제가 어느정도 풀리든지 또는 북한이 미국과의 수교협상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남북 인적교류가 또 한차례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리 입장은 남북간의 자유로운 인적 교류 추진으로 북한사회에 「자유바람」을 유입, 개방을 촉진시키고 민주화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인적 교류에 대한 우리 입장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동·서독인의 자유왕래가 동독사회의 붕괴를 가져왔던 것처럼 인적 교류가 남북관계에서 마지막 선택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구도를 보더라도 주한미군 철수 등 연방제 전제조건이 실현된 뒤에야 연방제가 구성될 수 있고 그 뒤에나 「10대 시정방침」의 일환인 인적 교류가 차례로 추진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남북주민의 「자유왕래」도 북한에 있어 선전적 차원 이상일 수 없다.

북한이 한때 통일열기를 확산시키면서 인적 교류를 제한적으로 추진했던 것은 위기모면적인 체제수호 전략일 뿐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앞으로 북한이 같은 목적에서 제한적 인적교류를 확대시킬 가능성은 있다. 그것은 북한의 경제가 한계점에 달하고 미·일과의 수교문제를 풀지 못하면 남한과의 경제교류는 불가피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제에 영향을 줄 어떠한 교류도 허용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당분간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서신교환, 북한관광, 특파원 상주 등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4. 남북한 이산가족 교류

남북한 이산가족의 재결합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반드시 성취해야 할 민족적인 당면과제로서 한국의 계속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북한의 불성실한 태도로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이산가족들은 분단시 비극적으로 헤어진 가족이라 할지라도 피와 눈물에 앞서 ‘반동’가족의 일원으로 낙인찍혀 박해받을 존재이며 그들은 재결합 주장을 발설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가족이기에 앞서 ‘반동’이고 ‘적’이며 ‘美帝’로서 ‘남조선’의 앞잡이 노릇을 그만두고 월북하지 않는 한, 재회의 가족은 ‘반역자’인 것이다.

이산가족이 아니더라도 북한은 그들의 비가족화 정책으로 인하여 가족간의 혈연의식이나 가족관념은 상당히 퇴색되고 있다. 가정이란 본래 애정과 존경을 바탕으로 한 가족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신성불가침의 보금자리이지만, 북한에서는 가정이 ‘넓은 사상과 유습’의 온상으로 간주되어 한낱 사회적 경제활동을 위한 가족성원의 합숙생활을 영위하는 곳으로 변질되었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비록 부모와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소위 ‘당적 원칙’과 ‘수령의 교

시'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였을 때에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소속단체의 간부에게 보고하는 것이 도덕적 규범처럼 강요되어 있다. 북한에 있어서 가족법상 인척은 아무런 친족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있어²¹⁾ 시부모와 며느리, 처부모와 사위 관계는 친족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한편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경제도 정치요, 사회, 문화도 정치요, 체육도 정치요, 인도도 정치요, 기술도 정치이며 무엇이든지 정치 아닌 것이 없다. 즉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인도, 기술 등은 정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의 이산가족 찾기 제의에 대하여 “최고의 인도주의는 곧 통일이며, 통일을 떠난 인도주의는 없다. 따라서 남한의 반공 관계 법률이 선행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산가족, 친척문제를 정치 문제와 결부짓고 순수한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거부했다. 북한의 1인독재 우상화 체제속에서 이산가족이란 매우 거추장스런 존재이며, 그러한 문제가 북한사회에서 거론하는 것부터 반당행위로 낙인을 찍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북한에게 남북 이산가족 재결합을 위한 적십자 회담이란 오로지 그들의 기본 전략인 ‘남조선 혁명’을 앞당겨 성취하기 위한 방도로 필요한 것이지, 인도주의니, 정치적 중립이니 하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단순한 이산가족 재결합이란 ‘남조선 해방’에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의 성공적인 결합은 폐쇄된 북한체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어 오

21) 김남식, “북한의 가족제도에 대한 고찰”, 「국토통일」 제4권 제5호, 서울: 국토통일원 1974, pp. 30~31.

히려 그들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은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이산가족의 재결합은 북한이 한반도 공산화 통일노선을 전적으로 버리지 않는 한 금년에도 성취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Ⅱ. 綜 合 討 論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빈 면

綜 合 討 論

토 론

사회자 : 김달중(연세대 교수)
토론자 : 강성학(고려대 교수)
 도준호(조선일보 북한부장)
 서시주(연합통신 국장)
 이청수(KBS 해설위원장)

사회자: 오늘의 지정토론자는 북한, 통일, 핵문제 등에서 식견이 높고 이 분야에서 영향력이 큰 네분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분을 순서대로 간략히 소개하면 강성학(고려대학교 정의과교수), 도준호(조선일보 북한부장), 서시주(연합통신 국장), 이청수(KBS 해설위원) 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곧바로 지정토론자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강교수님의 말씀부터 들겠습니다.

강성학: 북한문제의 전문가이신 세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본인은 북한 문제의 전문가가 되고 싶었지만 연구할 기회가 없어 전문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북한전문가가 아닌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전문가는 전문적으로 틀리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문제는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기 보다는 한국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핵문제에

대해 별로 걱정을 하지 않고 있고 핵위협에 대해서 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미국이 앞장서서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1968년의 푸에블루호 사건이나 청와대사건 등이 있어올 때는 한국정부가 강경하게 나섰고 미국이 한국을 달랬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바뀌어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매우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본인은 매우 당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우선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만약 계속 핵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다가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북한은 한국에 대해 위협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 결과 북한이 안정되고 어찌면 북한이 통일을 주도하리라고 생각하는 남한내 친북세력이 사회혼란을 가져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분의 발표문에는 북한의 핵이 남한에 대해 진정으로 위협인가 아닌가 위협이라면 얼마나 위협이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습니다.

첫째, 구체적으로 양성철 교수는 '3가지 그릇된 신화'를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여기에 하나를 더 첨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북한과 남한이 하나의 민족이란 신화입니다. 분명 우리는 같은 민족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김일성집단은 같은 민족에 포함하기는 매우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동족에게 총을 들이댄 카인과 같은 형제이므로 차라리 낯선 이웃보다 못한 악질적인 형제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남한이 같은 민족이고 더 나아가 북한이 핵무장을 한들 우리민족이 핵무장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

로 이런 점에서 남북한이 한민족이란 신화가 북한의 특정집단을 감싸버리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란 신화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과 한국의 time table이 일치하는 때를 기다려야 하고 북한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동서독은 그만 두고라도 미국이 소련을 잘 도와주었다라면 오늘날 소련의 변화가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또한 세 나라의 time table을 맞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북한사람들이 김일성이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따라서 우리도 김일성 사후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그렇다면 김일성이 앞으로 20년이나 더 산다면 우리가 북한핵문제를 2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둘째, 전성훈박사는 북한핵에 대한 종합적·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 하면서 스스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직접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북한핵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과장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자신의 이런 평가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한 것 같지도 않은데 우리가 너무 북한핵문제에 대해 상호사찰 등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이 남북협상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은 북한이 핵을 갖기 전에 저지해야지 보유한 다음에 협상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북한이 핵을 보유하기 전에 협상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북한이 확실히 핵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화적인 정책을 취한다는 것은 잘

못된 길로 접어드는 것이라 봅니다.

셋째, 유석렬교수의 남북한 관계 전망 중 남북경제교류 관계에 대해서만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핵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남북경제교류가 사상침투를 차단한다는 전제하에서 ‘북한식’의 개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핵문제가 북한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과 일본과의 수교를 통하여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남한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경제적 규모로 보나 김일성의 자존심으로 보나 남한보다 미국과 일본의 도움을 원할 것이라 봅니다.

넷째, 총체적으로 우리는 북한핵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핵의 가장 큰 피해 대상이고 시기적으로 국제적인 환경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걸프전 이후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유엔의 위상이 강화되었으나 앞으로 다극화의 추세속에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유엔에서 미국이 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워질 것이고 이에 따라 북한제재의 정당성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또 브레진스키 같은 사람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말하지만 별 효과가 없으리라 봅니다. 거지에게 경제제재를 가한다고 거지가 겁을 먹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거의 자급자족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은 무력제재를 단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 권력집단이 두려워 하는 것은 설득이나 논리, 경제제재가 아니라 힘에 의한 위협이라고 봅니다.

도준호: 방금 강교수님이 강경한 발언을 하셨는데 본인도 핵문제

에 대한 정책이 처음부터 강경한 입장을 취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미나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정책이 이제 방향 전환을 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란 생각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교수와 유교수의 견해에 대해 대체로 찬성합니다. 단지 북한을 적과 동지와 동반자로 보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저의 기억에는 북한이 지금까지 동지가 된 적이 없다고 봅니다.

전성훈박사의 상호사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핵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뤄보고 싶습니다.

우선, 핵투명성의 정의부터 정리되어야 겠다. 미국의 입장은 7곳의 사찰과 2곳의 특별사찰을, 우리의 입장은 여기에 상호사찰까지 하고 나면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투명성에 대한 기준이 온당한 것인가? 또 투명성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있는 것인가? 우리정부는 외견적으로는 있지만 실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정부의 핵정책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상호사찰의 문제도 대통령의 연두회견에서 반드시 상호사찰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정치적 발언인지 아니면 정말 상호사찰까지 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호사찰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냐, 상호사찰 수행능력이 있느냐? 본인의 견해로는 상호사찰을 수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전박사께서 상호사찰문제를 한반도비핵화선언에 따른 논리적 귀결로써 제기하였는데 핵문제가 논리적으로 해결되어 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남북문제가 꼬일 이유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호사찰 문제는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봅니다. 상호사찰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다른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남북한이 직접 접촉해서 얻을 것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북한과의 직접협상보다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외교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과의 외교를 강화하여 중국을 통해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하나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김일성의 사전과 사후에 있어서 대북정책이 달라져야 합니다. 북한은 아무리 어려워져도 김일성이 살아있는 한 대남 우위입장을 강조하고 남한에 대해 계속 강공책을 쓸 것입니다. 따라서 김일성이 살아 있는 동안 대화가 거의 안되리라 보며 여기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정책은 곤란합니다. 반면 김일성의 사후에는 대화나 설득이 훨씬 잘 먹혀들어 가리라 생각합니다.

서시주: 우선, 북한 핵문제가 제기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동구권의 붕괴, 외부사조의 유입 등에 따른 체제 붕괴의 위협을 타개하고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② 현재 북한 군사력이 우위에 있지만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경제력격차 때문에 조만간 군사력에서 조차도 북한이 열세에 처하게 되어 이에 대한 손쉬운 대안으로서 ③ 대미수교의 카드로서 핵문제를 제기했다고 봅니다.

둘째, 북한의 핵개발의 실체에 대해서 미국의 정보기관은 1~2Kg, 한국의 정보기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며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등 견해가 일치되지는 않으나

대체적으로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못했거나 보유했다 하더라도 남
한에 큰 위협을 주지는 않는 수준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북한핵문제의 제기배경이나 북한의 핵의 실체를 종합해 볼
때, 북한핵 문제는 남한보다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에 대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대화가 주된 것이고 남북대
화는 종속변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이러한 북한핵문
제에 대해 올바른 정책을 취해왔는가? 일관된 정책을 취해 왔는
가? 미국정부는 한국의 대북한 핵 정책이 일관성이 없음을 비판하
고 있습니다.

어제 IAEA와 북한과의 5차 실무접촉이 가졌지만 협상의 진전
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방사화학실험실과 영변의 5MW원자로의
핵연료봉에 대한 IAEA의 요구를 전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북한측
의 반발 때문입니다. 이는 북한이 IAEA와는 협상하지 않고 미국
과 협상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북한과 핵협상할 때 한국과 사전협의를 한다고 하나 한
국의 핵정책이 일관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이 약속을 믿긴 하지
만 한국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을 때 미국이 한국의 어떤 정책을 따
르겠는가? 핵문제를 남북대화과 연계시킴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남
북대화를 묶어버린 결과를 낳았습니다. 세분이 발표하였듯이 핵문
제가 단시일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핵문제와 남북대화
의 고리는 끊어야 합니다. 북한은 시간을 끌면서 핵문제라는 히든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여 TS훈련중지, 미국·일본과의 수교 등 언을
것을 다 얻고서야 히든카드를 오픈할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북한
핵과 다른 것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북한의 대남전략이 통일보다는 체제수호라는 데 있는 것은 분명

하지만, 우리의 대응은 과거와 달라야 합니다. 북한의 정책에 대해 남한이 똑같은 수준에서 즉자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냉전식 사고의 소산입니다. 이제는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북간의 관계개선은 북한핵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쉽게 이루어지리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바라는 것은 체제유지이지 통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더라도 우리는 도량을 파악합니다. 지금 당장 물이 흐를지 안 흐를지 모르지만 도량을 파악해야 앞으로 물이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주변환경은 통일의 가장 좋은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때를 놓쳐서는 30~40년을 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대남적화전락이 여전하다는 점을 전제로 냉전식의 사고를 탈피하여야 합니다.

이청수: 첫째, 사소한 문제를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양성철교수의 발표문 중에 NPT수정이나 연장여부가 1995년 5월이라고 잘못 기술된 부분이 있는데 이는 1995년 3월 5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NPT는 1968년 조인되고 1970년 3월 5일 발효되었고, 1995년 3월 5일 이전에 수정하거나 연장 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NPT 조약 10조 2항).

둘째, 북한의 핵개발 수준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의 핵개발 의지는 분명하고 상당 수준의 개발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IAEA의 사찰과 남북한상호사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IAEA의 사찰은 NPT조약상 평화목적용 핵재처리시설, 농축우라늄시설은 가져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과학의 발달

로 평화목적용 해재처리시설은 2~3달 만에 전쟁목적용 핵시설로 전환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한의 입장은 이런 위험 때문에 비핵화선언을 통해 평화목적용 핵시설을 갖지 말자는 것이고 상호사찰에 평화목적용 핵시설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셋째, 문제는 북한이 상당 수준의 핵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웬만한 압력으로는 파기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투명성(완벽한 핵사찰)이 보장된 후 남북관계개선이란 기존의 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핵사찰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한핵카드가 bluff(허세)라면 북한으로서는 실상이 드러나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핵사찰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진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면 탄로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완벽한 사찰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으로서는 핵문제가 hidden card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완벽한 핵사찰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완벽한 핵사찰은 백년하청입니다. 불완전하지만 빨리 핵사찰에 들어가야 합니다. IAEA에 대해서도 이런 방향으로의 사찰을 중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현재 북한의 7개 미신고 시설 중 방사화학실험실과 5MW원자로의 핵연료봉 등 2가지를 사찰하면 거의 북한의 핵개발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북한으로서는 완벽한 사찰을 수용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대로 일단 사찰을 하고 조금의 문제가 나타나면 다음 단계의 사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적인 방식을 택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영원히 고착될 가능성이 큼니다.

넷째,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북한이 핵을 완전히 노출시키지 않으려 하고 또 감추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감출 방법은 있습니다. 북한은 공

식적으로 평화목적용의 핵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도 평화목적용 핵개발을 한다고 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우리를 속이고 핵개발을 한다면 우리도 평화목적용 핵시설을 전환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하면 북한의 핵개발을 합리화시켜주는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 IAEA의 사찰 결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폐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갖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핵화선언에 위배된다는 문제도 있지만 이미 북한이 비핵화선언을 사문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비핵화선언을 부분적으로 유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도 이에 대해 더이상 핵개발을 중지한다든지 아니면 상호사찰에 응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북한이 핵개발을 한다면 우리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70년대 중반에 박대통령이 미국의 압력으로 중단했었는데, 이를 미국이 허용하겠는가? 그러나 70년대 자주국방을 내걸며 비밀리에 추진한 반면 이 경우는 평화목적용이며 미국과 상의하면서 진행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명분은 일본의 핵시설입니다. 일본은 평화목적용 핵재처리 시설, 농축우라늄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해 4월 일본은 세계 최대의 핵재처리 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핵무기만 갖고 있지 않을 따름이지 일본 기술로는 1~2달이면 전쟁목적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핵재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한다고 공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전제하에 남북한 관계개선은 서로의 기대를 충족하는 접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은 궁극적으로 핵투명성이 보장되고 북·미, 북·일간 관계개선이 되면, 핵도 갖고 경제상황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반면 우리는 그 결과 북한체제가 개방되어 무너지거나 합의통일을 해오게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일방의 기대만이 아니라 양자의 기대가 충족되는 선에서 평화통일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북한이 개방을 하게 되면 붕괴될 것이다 혹은 반대로 북한경제가 개선되면 남한을 정복할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되면 평화통일이 안됩니다. 좋은 의미의 착각을 하게 해야만 평화통일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자: 네분의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분의 문제제기를 간단히 요약하면 서시주국장께서는 과연 한국의 행정책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청수해설위원께서는 한국의 평화목적용 핵개발과 완벽한 상호사찰이 아닌 단계적 사찰을 주장하셨습니다. 도준호북한부장께서는 상호사찰의 비현실성을 말씀하셨고 강성학교수께서는 북한핵에 대한 무력제제를 거론하셨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에게 질문의 시간을 주기 위해 세분 발표자들께서는 이들 질문들에 대해 짧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유교수님부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렬: 제가 답변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교수는 우리가 핵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고 하시면서 푸에블루호사건과 비교하였는데, 강교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당시 한국보다 미국이 더 강경한 대응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는 일차적인 피해당사자가 우리이고 워낙 미묘한 문제라 우리가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책이 일관성이 없게 보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한 부서만 아니라 국방

부, 통일원, 안기부, 외무부 등 전 부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 온 것을 보더라도 사안의 중요성을 감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핵 위협이라는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강교수님 말씀처럼 무력 제재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그에 따른 우리의 피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핵문제 해결후 북한은 남한보다는 미국, 일본과의 경제교류를 선호할 것이라 전망했는데, 지금의 한·미·일 국제정치상황을 보면 남한과의 교류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은 불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또한 최근 들어 북한은 남북연방제를 한층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공존을 즉 남한에게 흡수통일당하지 않고 북한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기대하는 남북의 공존은 남북경제교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셋째, 서시주국장이 한국의 핵정책이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핵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루다보니까 일관성을 잃었다는 인상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이청수해설위원이 말씀하신 평화목적용 핵개발문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례로 월성원자력발전소에도 항상 감시카메라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의심을 덜기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더 부착해서 안전성을 보여주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핵무기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전성훈: 첫째, 강성학교수가 미국의 정책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시행정부나 클린턴행정부나 대체로 일관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불분명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부시정권에서 클린턴정권으로 바뀌면서 정책조율이 제대로 안된 측면이 있

고, 또 과거 부시행정부의 핵정책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의 핵정책이 일관되게 비쳐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둘째, 북한핵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서 ‘객관적’이란 의미는 북한핵에 대한 information source를 다원화하자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북한 핵정보는 거의 미CIA에 의존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CIA는 북한이 핵무기를 1개 이상 보유했을 가능성이 50% 이상, 최대 12Kg의 플루토늄을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런 평가는 모든 조건을 북한측에 유리하게 설정했을 경우의 최대 추정치라 생각합니다. 과거 미CIA는 이라크의 핵능력을 과소평가한 적이 있는데 이런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북한의 핵능력을 최대치로 발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도준호부장께서 상호사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핵투명성은 사찰방법에 달린 것이 아니라 같은 사찰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심도있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제가 5MW원자로에 대한 충분한 샘플채취를 강조하는 이유는 5MW원자로에 있는 수천개의 연료봉 중에 한두개가 아니라 IAEA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하게 되면 2개의 미신고 시설을 사찰하는 것 이상으로 북한 핵투명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청수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의 핵개발의지와 능력에 대해 공감합니다만, 북한의 핵개발 의지와 이미 습득한 기술을 포기시킬 수 없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북한의 핵개발이 더이상 계속 되지 못하게 차단하고 장기적으로 북한의 의도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대북한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

한을 고립시키기 보다는 대화를 통한 접근방법, 북한과 좀더 빈번히 접촉하고 교류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측면에서 남북한 평화적 핵이용에 대한 협력도 강조되는 것입니다.

양성철: 첫째, 이청수해설위원의 ‘평화목적용 핵재처리시설’이란 주장에 대해 두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진행되고 있는 핵협상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먼저 들고 나오는 것은 비핵화선언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합리화하는 구실을 주게 됩니다. 또한 남북한 동시핵사찰이 비핵화선언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부정한다는 면에서 재처리시설은 현재 선언으로 되어 있지만 조약도 파기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미군철수와 마찬가지로 시간문제, 즉 어떤 여건하에서 미군철수와 감군문제가 나오고 선언에 관한 파기 문제가 나오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은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강성학교수는 북한은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하면서 북한을 카인으로 비유하셨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카인과 아벨은 같은 형제입니다. 본인은 지금의 분단상황을 마치 과거 3국시대처럼 1민족 2국가의 상황으로 봅니다.

셋째, 김일성이 오래 살게 되면 김일성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인가 라고 반박하셨는데, 그 문제는 김일성생존시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점을 염두에 두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넷째, 우리의 핵정책을 과거 푸에블루호를 빗대면서 너무 소극적이라 비판하셨는데, 남한은 북한의 핵개발의 가장 큰 피해대상자인 입장에서 푸에블루호사건은 그야말로 ‘사건’이고 핵문제는 ‘문제’

로서 양자의 비중은 매우 다릅니다.

다섯째, 사회심리적 견지에서 나이가 들수록 또 거리가 멀수록 자신과는 직접관련이 없기 때문에 호전적이 된다고 합니다. 남한은 북한의 핵개발에 제1차적인 피해대상자입니다. 반면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평화적인 방법과 비평화적인 방법이 있습니다만, 남한 으로서는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때 남한이 이를 저지하거나 제재하기에는 엄격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점 때문에 핵 정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는 것이지 이 문제의 심각성이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회자: 세분 선생님의 발표와 네분 지정토론자의 문제제기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여기 참석해주신 플로어에 계신분께 토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북한연구소 조용화: 강교수님은 경제제재가 효과가 없으며 무력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이 자급자족체제이기 때문에 경제제재가 별 효과가 없으리란 점은 동감합니다만 그렇다고 무력제재에 대해 북한은 무력대응을 할 가능성이 큰데 남북의 제2의 전쟁도 감수해야 한다는 말씀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대 김우현: 질문이 아니라 핵문제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북한 핵문제는 핵 자체만으로 보아서는 곤란합니다. 이 문제를 귀납적으로 분석해보면 핵문제의 해결책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북한핵의 역할을 규명해 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북한핵문제를 거론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미국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의도가 무엇이겠

는가? 국제질서는 미국과 중국의 양극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핵문제는 바로 미국의 대중국 봉쇄체제 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밖에 미국의 대중봉쇄정책으로 중국의 인권문제 개입, 개방압력, 일본·미국 주도의 동북아 집단안보조약, COCOM에서의 중국배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 주변 국가들은 남북의 통일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핵문제를 장기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핵연계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남북관계 개선의 전망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핵문제와 남북대화를 연계시키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사회자: 플로어에서 강박사님께 질문한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화: 강경책은 곧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 라는 질문은 예상된 질문입니다. 나는 냉전적 사고의 소유자가 아니라 전략적 사고의 소유자입니다. 나의 강경책은 UN을 통한 강경한 제재를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도 그런 제재가 잘못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대해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 북한이 공격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걸프전 이후에 감히 북한이 도전해 오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준비한다는 것이 협상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2차대전의 영웅루즈벨트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행정부의 핵정책은 매우 신중한 것이고, 또 이런 신중한 정책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신중한’ 정책이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는 우리에게 더 큰 놀라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세분의 훌륭한 발표와 이에 못지않게 네분의 지정토론자께서 중요한 시각들을 제시해주셔서 대단히 흥분되게 오늘 발표회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세분의 좋은 논문발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북한문제, 남북관계, 핵문제 등에 대한 좋은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십시오. 주최측에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표회를 마치겠습니다.

〈附錄：會議概要〉

會 議 日 程

- 13:30-14:00 登 錄
- 14:00-14:05 開會辭：李秉龍(民族統一研究院 院長)
- 14:05-15:05 主題發表
 - 司會：金達中(延世大 教授)
 - 發表：梁性喆(慶熙大 教授)
 - “北韓 核斗 對北政策”
 - 全星勳(民族統一研究院 責任研究員)
 - “北韓 核問題 解決을 위한 戰略的
選擇斗 協商對策”
 - 柳錫烈(外交安保研究院 教授)
 - “北韓 核問題斗 南北韓 關係 展望”
- 15:05-15:20 Coffee Break
- 15:20-17:00 討論：姜聲鶴(高麗大 教授)
 - 都俊鎬(朝鮮日報 北韓部長)
 - 徐時柱(聯合通信 局長)
 - 李清洙(KBS 解說委員長)

● 發刊資料目錄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
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
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
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社會 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 1990년대 東北亞秩序 豫測(III) －
- 93-07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
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의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綜合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
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
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 會議을 契機로 본 亞·太
地域協力の 展開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1993. 12. 31)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資料〉

92-01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 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세미나시리즈 94-01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6, FAX : 232-5341
印刷處 양동문화사 전화 : 272-1767
印刷日 1994년 2월 일
發行日 1994년 2월 일
